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외교학 석사 학위 논문

미국의 미사일 방어 협력 요청에 대한 한국 정부의 수용성

1983 ~ 1999 한국 정부의 수용성 결정요인을 중심으로

2022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부 외교학 전공
홍 승 진

미국의 미사일 방어 협력 요청에 대한 한국 정부의 수용성

1983 ~ 1999 한국 정부의 수용성 결정요인을 중심으로

지도교수 전 재 성

이 논문을 외교학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6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부 외교학 전공
홍 승 진

홍승진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2년 7월

위 원 장 신 범 식
부위원장 전 재 성
위 원 조 동 준

국문초록

미사일 방어에 있어 미국의 협력 요청과 한국의 수용성 문제는 1983년 레이건 정부의 전략방위구상(Strategic Defense Initiative : SDI)이 추진되면서부터 시작된다. 소련의 대규모 탄도미사일을 우주에서 요격한다는 작전개념의 실현을 위해 천문학적인 비용투자와 기술개발이 필요하였고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동맹국들의 협력을 요구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한국은 미국의 협력요구에 일관된 거부입장을 보인 것으로 여겨졌으며, 기존 연구들은 1990년대 후반 일본이 미국과의 미사일방어 협력을 수용했다는 점에 주목하여 한국과 일본의 비교를 통해 미국과의 미사일 협력에 대한 서로 다른 정책 차별성의 원인을 설명하고자 했다.

하지만, 2019년 공개된 SDI 외교문서는 전두환 정부가 내부적으로 SDI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였음이 드러났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정부가 1983년 미국의 미사일방어 협력요구 이후 비공개로 참여를 결정하였지만, 이후 계속적인 유보 입장을 보이다 1999년 김대중 정부에서 공개적인 거부로 선회하였음을 사실을 알게 한다.

이러한 사실은 기존 일본과의 비교분석 연구들이 1990년대 후반의 '거부'시점에 주로 집중하고 국가 내에서의 시기별 비교 연구에 소홀했다는 점이 지적되며, 시기별 수용성 결정의 변화과정에 대한 연구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렇다면, 한국 정부가 미국의 미사일방어 협력 요구에 대한 '유보'적 입장에서 '거부'적 입장을 나아간 이유는 무엇일까?

본 연구는 로스노우(James Rosenau)와 예비이론과 케글리와 위트코프 등 3인(Charles Kegley, Jr. and Eugene Wittkopf)이 제시한 깔때기 이론을 준용하여 1983년부터 1999년 한국 정부의 정부별 미국의 미사일방어 협력요구에 대한 수용성의 변화상을 추적하고 '유보'에서 '거부에 이르는 수용성 결정요인을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김대중 대통령의 축소 지향의 군사적 균형 추구가 한국 정부의 수용성을 '거부'로 바꾼 핵심 요인이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낙관주의와 자신만의 통일론을 정립한 인물로 그의 평화 통일론은 한

반도의 군사적 균형이 축소지향적인 군비통제가 이루어지는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신념화된 통일관은 미국의 미사일방어 협력요구를 '거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처럼 미국의 미사일방어 협력요구에 대한 한국 정부의 수용성 결정요인을 각 정부별 비교를 통해 살펴본 본 연구는 외교정책 결정에 있어 개인변수가 가지는 영향력을 보여주었으며, 주로 국가 간 비교를 통해 정책 차별성의 원인을 분석한 기존의 미국의 미사일방어 협력 요구와 한국의 수용성 논의를 확장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주요어 : 미사일 방어 정책, 한국, 미국, 외교정책 결정 과정
학 번 : 2020-20915

목 차

Ⅰ. 서론 ····· 1
1. 연구배경 및 문제제기 ····· 1
2. 논문의 구성 ····· 2

Ⅱ. 이론적 논의 ····· 3
1. 기존 연구 검토 ····· 3
1) 외교정책과 군사외교로서의 미국과의 미사일방어 협력····· 3
2) 외교정책 결정론 ····· 4
3) 한국과 미국의 미사일방어정책 협력에 관한 연구 ··· 5
4) 분석틀 ·····11
(1) 독립변수, 종속변수, 핵심가설 ····· 13
(2) 연구범위와 연구방법 ····· 13

Ⅲ. 사례연구
: 1983년 ~ 1999년 미국의 MD 협력 요구에 대한 한국의 수용성 결정요인 ·····15

1. 미국의 SDI 계획과 전두환 정부의 비공개 참여····· 15
1) 데탕트의 후퇴와 레이건 정부의 SDI 계획·····15
2) 전두환 정부의 참여검토와 참여결정의 비공개·····16
3) 전두환 정부의 SDI 참여결정의 배경 ·····19
(1) 동북아 신냉전 질서와 한미협력 강화·····19
(2) 극심한 북한의 대남도발과 예산 부족으로 인한 전력 획득의 우선순위 ····· 22
(3) 전두환 대통령의 긍정적 對美 이미지와 북한에 대한 높은 위협인식 ····· 25

2. 탈냉전에 따른 국제정세 변화와 노태우 정부의 SDI · GPALS 유보····· 28
1) 탈냉전으로 인한 미국의 미사일방어 전략 변화와 한국의 참여 유보 ·····28
2) 노태우 정부의 SDI, GPALS 유보결정의 배경 ····· 30
(1) 탈냉전기의 평화 분위기와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 ····· 30
(2) 북한의 도발 빈도의 급격한 감소와 한국의 전력획득 우선순위 ····· 34
(3) 노태우 대통령의 '민족자존' 외교이념 ····· 36

3. 북한 핵 위기와 김영삼 정부의 TMD 유보 ····· 39
1) 클링턴 정부의 BMD계획과 김영삼 정부의 TMD 유보·····39
2) 김영삼 정부의 TMD 유보결정의 배경 ····· 40
(1) 북한 핵 위기로 인한 미사일방어 문제의 국내 정치·사회적 쟁점화 ····· 40
(2) 김영삼 대통령의 주도성 추구 성향과 북한에 대한 높은 위협인식 및 보수성 ····· 46

4. 대북 포용정책과 김대중 정부의 TMD 거부 ····· 49
1) 클링턴 정부의 TMD 참여 요구와 김대중 정부의 거부····· 49
2) 김대중 정부의 TMD 거부 결정의 배경····· 52
(1) 페리프로세스와 김대중 정부의 일관된 대복포용정책 ····· 52
(2) 김대중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낙관주의와 평화통일론 ····· 53

5. 美 MD 협력요구에 대한 한국의 수용성 결정요인 비교 ·· 57

Ⅳ. 결론 ····· 59

참고문헌 ····· 61

표 목 차

[표 2-1] RISS를 통해 검색한 시기별 '미사일 방어 정책' 관련 국내 학위 및 학술논문 ····· 6
[표 2-3] '미사일 방어 정책' 관련 국내 학술논문 주요 키워드 ····· 7
[표 2-3] '미사일 방어 정책' 관련 국내 학위논문 주요 키워드 ····· 8
[표 3-1] 1980~1988 방위력 개선비와 사용 목적 ····· 23
[표 3-2] 1970~1986 북한의 미사일 개발 일지 ····· 24
[표 3-3] 1980~1987 북한의 대남도발 양상····· 34
[표 3-4] 1988~1993 방위력 개선비와 사용 목적 ····· 35
[표 3-5] 1970~1986 북한의 미사일 개발 일지 ····· 42
[표 3-6] 1994~1998 방위력 개선비와 사용 목적 ····· 43
[표 3-7] 정부별 美 MD 협력요구에 대한 한국의 수용성 결정요인 ····· 57

그 림 목 차

[그림 2-1] 1983~1999 미국의 미사일방어 협력 요구에 대한 한국의 수용성 결정요인 분석틀 ····· 12
[그림 3-1] 1983 ~ 1988 한국의 무역 의존도 ····· 31
[그림 3-2] 1988 ~ 1993 한국의 무역 의존도 ····· 32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문제제기

미사일방어에 있어 미국의 협력 요구와 요구에 대한 한국의 수용성 문제는 1983년 미국의 레이건 정부가 전략방위구상(Strategic Defense Initiative : SDI)을 추진하면서 시작된다. 적의 탄도미사일을 우주에서 요격한다는 작전개념을 가진 미국의 새로운 미사일방어 프로그램의 실현을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비용투자와 기술개발을 요하였고,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미국은 동맹국들의 협력을 요구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미국의 협력요구에 대한 한국의 선택은 거부였다. 기존의 연구들은 일본이 미국과의 미사일방어 협력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는 점에 비추어 한국과 일본의 비교를 통해 한국의 수용성 결정요인을 설명하고자 했다.[1] 한국과 일본 모두 미구의 강력한 동맹국으로서 미국으로부터 핵우산은 제공받고 있으며, 지리적으로 인접한 이웃 국가임과 동시에 두 국가 모두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에 위협을 느낀다는 점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협력에 있어 정책 차별성을 보이는 이유가 궁금했기 때문이다.[2] 이들 연구들은 한국과 일본의 경제력 차이, 한국과 일본의 정부 성향 차이,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인식 차이,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에 대한 입장 차이, 그리고 중국에 대한 상대적 취약성 등을 강조하며 두 국가의 정책 차별성에 대해 설명하고자 했다.

하지만, 2019년 기밀 해제된 외교부 문서는 미국의 미사일방어에 대한 한국의 수용성 결정요인에 대한 다른 해석을 요구하고 있다. 전두환 정부에서 레이건 정부가 추진했던 SDI 사업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였다는 것이 외교문서에서 드러났기 때문이다.[3]

---

1) 이현석. 2015. "한국과 일본 미사일 방어정책 비교". 서울대학교 대학원.
2) 전성훈, 미 일의 TMD 구상과 한국의 전략적 선택 (서울: 통일연구원, 2000). p. 8.
3) 외교부 외교사료관, 2019년 비밀·비공개 해제문서 "미국 SDI(전략방어계획) 참여, 1985-88. 전6권 제1권 한국의 참여 검토, 1985" 등록번호 26669 (검색일: 2022년 5월 25일)

이러한 사실은 기존의 연구들에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시한다. 첫째는 미국의 미사일방어 협력요구에 대한 수용성 문제가 기존 연구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1990년대 후반에 결정된 것이 아니라, SDI 계획이 구상되었던 1983년부터 있어왔으며 한국 정부는 매번 수용성 결정을 해왔다는 점. 둘 째, 전두환 정부의 내부적 참여 결정은 한국 정부의 입장이 대외적으로는 '유보'적 입장이었지만 김대중 정부에 이르러 공개적인 '거부'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의문은 기존 일본과의 비교분석 연구들이 1990년대 후반의 '거부'시점에 주로 집중하고, 국가 내에서 이루어진 각 시기별 비교연구에 소홀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시기별 수용성 결정의 변화과정과 그 이유에 대한 연구필요성으로 이어진다. 그렇다면, 한국 정부가 미국의 미사일방어 협력 요구에 대한 '유보'적 입장에서 '거부'적 입장으로 나아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본 연구는 한국이 미사일 방어에 있어 동맹의 협력 요구에 수용성의 정부별 변화상을 추적하고자 한다.

2. 논문의 구성

본 연구의 1장에서는 서론으로 본연구의 배경과 기존연구에 대한 문제제기 및 연구 질문을 제시하고, 2장에서는 이론적 논의로서 기존연구 검토에서는 본연구의 종속변수인 '미국의 미사일방어 협력요청에 대한 한국의 수용성' 문제의 성격을 규명하고, 외교정책 결정론과 미국과의 미사일방어 협력 수용성문제에 대한 기존연구를 검토하고 본연구의 분석틀을 제시하며 본연구가 설정한 연구범위와 독립변수 및 종속변수 그리고 핵심 가설에 대해 설명한다. 3장에서는 2장에서 제시한 분석틀을 토대로 1983년부터 1999년 미국의 미사일방어 협력요구에 대한 한국의 수용성 결정의 사례연구와 각 정부별 비교분석을 하고 4장 결론에서는 본 연구의 이론적 함의와 정책적 함의, 연구의 한계에 대해서 다루겠다.

Ⅱ. 이론적 논의

1. 기존 연구 검토

1) 외교정책과 군사외교로서의 미국과의 미사일방어 협력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미사일방어 정책에 대한 협력 요구와 이에 대한 한국의 수용성 결정과정을 일종의 군사외교과정으로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장에서는 군사외교가 국가의 외교정책 그리고 국방정책 사이에서의 입지를 기존의 연구들을 통해 검토하고자 한다. 왈라스(William Wallace)는 외교정책을 한 국가의 국제환경에 대한 정책[4]이라고 정의하였고, 로스노우(James Rosenau)는 외교정책을 국가가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유지하거나 불리한 상황을 변경하기 위해 취하는 권위적 조치 또는 국제환경에서 자국의 이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활동이라고 정의하였다.[5] 러셋은(Bruce Russet)은 외교정책이 다른 행위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위해 노력하는 것이며 국내의 행위와 국제환경 사이의 연계라고 하였다.[6] 외교정책에 대한 학자들의 다양한 정의를 검토해 보았을 때 외교정책은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화기위한 국가가 대외적으로 수립하는 모든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외교정책의 이러한 정의를 고려하였을 때 미국과의 미사일방어 협력에 대한 결정 역시 국가 이익 극대화를 위한 외교정책의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외교정책의 분야는 굉장히 다양하며 군사 분야 역시 그중 하나이다. 국방부에서 발간한 군사외교 지침에는 군사외교의 분야를 군사교류와 군사협력 분야로 나누고 있다. 군사 교류에는 상호 훈련 참관, 인적 교환

---

4) William Wallace, Foreign Policy and the Political Process (London: The Macmillan Press, 1971), p. 17.

5) James N. Rosenau, "Comparing Foreign Policy: Why, What, How" in James N.Rosenau, ed., Comparing Foreign Policies: Theories, Findings and Methods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1974), p. 6.

6) Bruce Russett and Harvey Starr, World Political Process (London: Macmillan, 1971),

방문, 함정 및 항공기 교환방문, 군사교육 교류 등이 있고, 군사 협력으로는 안보정책 공조, 정보 및 첩보 교환, 군수방산 협력, 연합 훈련, 군사기지 제공 등을 말한다.[7]

여기서 본연구의 관심분야인 '미국과의 미사일 방어 정책 협력'은 미국과 미사일방어체제를 공동을 개발함으로 군수 방산 협력이자, 미사일방어 정보와 전략적 협력이 이루어짐으로 안보정책 공조이면서 정보 및 첩보 교환인 다차원의 군사협력인 것이다. 한국은 미국과의 군사협력 여부를 두고 협력 요구를 수용할지 거부할지 아니면 유보할지에 대한 정책결정과정에 놓였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수용성 문제는 큰 틀에서 외교정책 문제이므로, 외교정책 결정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다.

2) 외교정책결정론

외교정책 결정과정을 이론화한 대표적인 학자와 그 이론들로는 로스노우(James Rosenau)와 예비이론, 퍼트남(Robert David Putnam)과 투레벨게임이론, 케글리와 위트코프 등 3인(Charles Kegley, Jr. and Eugene Wittkopf)의 깔때기 이론 등이 있다. 이들 학자들은 외교정책의 결정이 국내·외 요인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러한 연계정치의 과정을 분석하는 틀을 제시하였다. 외교정책의 결정과정을 국내·외 요인들에 대한 상호작용적 접근과 그 안의 행위자의 행동을 합리적 행위자 모델, 인식(Congitive)모델 등이 혼합된 형태로 접근하는 방식은 이후의 외교정책 결정과정 연구들에게 널리 인용되어 졌다.[8]

로즈노우는 그의 예비이론에서 외교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소들을 개관하고 대외정책 결정요인에 대해 최초의 조직적 연구라는 점에서 선구적이었다. 그는 대외정책의 결정 변수로서 개인. 역할, 사회, 정부, 국제체제 차원 등 다섯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고[9] 각 요소들의 우열과 상호작용

---

7) 국방부, "군사외교 지침, 1997. pp. 5-6

8) Alex Mintz, "Foreign Policy Decision-Making: Bridging the Gap Between the Cognitive Psychology and Rational Actor Models," in Nehemia Geva and Alex Mintz, Decision Making on War and Peace: The Cognitive-National Debate (Boulder, CO, and London Lynne Rienner Publishers, 1997), p. 5.

에 주목하며 국내 및 국외적 요소의 연계를 시도하였다. 이후 이러한 국내·외적 요소들의 연계로 외교정책결정과정을 설명하는 시도들이 이어져 구조, 행위자, 규범 등 여러 변수들을 정의하고 변수들 간의 관계와 결정에 영향을 미친 우열을 확인하는 이론들이 생겨났다.[10] 하지만, 로스노우의 이론은 외교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분류하고 제시함으로써 결정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에는 성공하였지만, 설정한 변수들의 분류방법과 변수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미흡하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위트코프와 케글리, 스코트는 로즈노우가 제시한 외교정책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인용하여, 외교정책의 결정의 과정과 환류의 과정을 깔때기 모델로 제시한다.[11] 깔때기는 외교정책의 결정과정이 로즈노우가 제시한 여러 요인들의 투입과 정책결정자들의 정책결정과정 그리고 그 산출물들이 다시 환경에 영향을 받아 다시 투입되는, 투입과 산출 환류의 과정을 잘 보여주는 모델이다. 이러한 환류의 과정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원인변수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의 역동성을 강조하는데 용이하다.[12] 이러한 순환성은 국가의 외교정책이 시기를 달리하며 어떻게 변화하였는가의 변화상을 보여주는데 적합하다.

3) 한국과 미국의 미사일방어정책 협력에 관한 연구

한국의 미사일방어정책에 관한 연구는 매우 드물며, 미국과의 협력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더 희소하다고 할 수 있다. '미사일 방어'라는 키워드로 국내에서 가장 이용자가 많은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인 RISS를 통해 검색을 하면, 550건의 국내학술논문과 550건의 국내학술논문과 378건의 학위

---

9) James N. Rosenau, "Pre-Theories and Theories of Foreign Policy." in Barry Farrell. ed., Approaches to Comparative and International Politics (Evanston: Northwestern Univ. Press, 1966), pp. 43-44.

10) 박창건, 2010 "일본의 대외통상정책 결정요인: 다각적 연계 이론을 통해 분석한 FTA 전략 수립, 『세계지역연구총론 28집 1호, pp. 75-77.

11) Charles W Kegley Jr., Eugene Wittkopf, James M. Scott, American Foreign Policy (Belmont: Wadsworth, 2003), p.13

12) 김의곤, "미국 외교정책의 분석들, 이범준 외 편저, 『미국외교정책』(서울: 박영사, 2009),p. 55.

논문이 검색되는데 도합 928건의 검색자료 중 ‘정치학’에 해당하거나, 정치학적 함의를 가진 연구를 추리면 학위논문이 37건, 국내학술연구가 54건으로 총 91건의 연구가 이루어 졌으니 한국의 미사일방어정책에 대한 정치학적 연구는 매우 적게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 표 2-1 〉 RISS를 통해 검색한 시기별 ‘미사일 방어 정책’ 관련 국내 학위 및 학술논문

시기	연구 건수	
	학위논문	학술논문
2022년	1	2
2021년	2	3
2020년	4	0
2019년	0	4
2018년	3	3
2017년	11	5
2016년	14	0
2015년	4	2
2014년	0	2
2013년	2	0
2012년	1	2
2011년	0	1
2010년	1	3
2009년	1	1
2008년	1	0
2007년	0	0
2006년	0	0
2005년	0	0
2004년	1	1
2003년	0	2
2002년	2	2
2001년	1	3

2000년 이전	2	2
총 계	54 건	37 건

출처 : RISS 검색결과를 통해 저자가 재구성

또한, 이들 91건의 연구들이 수행된 시기를 보면 2016년과 2017년은 전체 연구의 33%(30건)가 이루어졌는데, 2016년 당시 사드(THAAD)배치를 둘러싼 국내적 관심 증가가 미사일방어 정책에 대한 주목도를 높인데서 기인했다고 할 수 있다. 〈표 2-3〉 과 〈표 2-4〉의 학술 및 학위연구의 주요 키워드는 이러한 추론을 뒷받침 하고 있다.

〈 표 2-2 〉 '미사일 방어 정책' 관련 국내 학술논문 주요 키워드

키워드	연구 건수
사드(THAAD), 사드와 주변국	23
북한 핵 미사일, 핵전략, 핵실험, 핵확산	10
미국의 MD구상(SDI, TMD, GPALS)	10
대응방안, 한국 안보	8
한중관계	8
한·일 미사일방어 정책 비교	6
이슈 보도, 미디어 프레임, 언론보도, 오인식	6
한국 미사일 방어(KAMD), 킬체인	4
동아시아 안보환경, 군비증강, 군비경쟁	4
미·중 패권경쟁	4
억제전략, 안보전략	3
안보딜레마	3
중국의 경제제재, 강압외교	3
동맹, 한미동맹, 동맹정책, 동맹요구 수용성	2
국가이익	1
정책결정	1

주한미군	1
우주 군사 전략	1
대미 편승 전략	1
군사적 효용성	1
중국 미사일 방어	1
정치화	1
적극방어	1
총 계	103 개

출처 : RISS 검색결과를 통해 저자가 재구성

〈 표 2-3 〉 **'미사일 방어 정책' 관련 국내 학위논문 주요 키워드**

키워드	연구 건수
동맹, 한미동맹, 동맹정책, 동맹요구 수용성	9
대응방안, 한국 안보	7
미국의 MD구상(SDI, TMD, GPALS)	6
동아시아 안보환경, 군비증강, 군비경쟁	5
사드(THAAD), 사드와 주변국	5
한국 미사일 방어(KAMD)	4
한·일 미사일방어 정책 비교	4
이슈 보도, 미디어 프레임, 언론보도, 오인식	4
북한 핵 미사일, 핵전략	3
한중관계	2
국가이익	2
정책결정	2
상호확증파괴	1
세력전이	1

무기획득	1
주한미군	1
억제전략, 안보전략	1
탈냉전	1
참여정부	1
안보딜레마	1
미 · 중 패권경쟁	1
인식차이	1
총 계	63 개

출처 : RISS 검색결과를 통해 저자가 재구성

한국의 미사일방어정책에 관한 선행연구가 이렇듯 굉장히 적게 이루어졌고, 미국과의 미사일방어정책에 협력요구에 대한 한국의 수용성 연구 역시 굉장히 희소한 연구 주제라고 할 수 있다.

한국과 미국의 미사일방어정책 협력에 관한 연구는 연구방법에 있어서 크게 2가지 갈래로 나뉜다고 할 수 있다. 하나는 일본과 한국을 비교를 통해 진행되는 연구로, 일본은 미국과 미사일방어 협력요구를 수용한 반면, 한국은 거부하게 된 정책 차별성을 밝히는 연구이고, 다른 한쪽은 한국 정부별로 미국과의 미사일방어 협력요구에 대한 수용성을 비교하는 연구이다.

먼저 한국과 일본의 정책 차별성을 비교하는 연구들은 주로, 탈냉전기에 접어들어 일본이 국내정치적으로 보수화되었던 반면, 한국은 진보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미사일방어 구축을 위한 비용부담이 세계2위의 경제대국이었던 일본보다 한국에게 더 부담으로서 작용하였다는 점, 중국의 압력을 강조하며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와 산업구조가 일본보다 한국이 취약한 상태였다는 점, 그리고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가 일본에게는 안보위협으로 다가온 반면, 한국은 이미 장사정포에 노출되어 있었기에 추가적인 안보위협이 아니었다는 점을 근거로 한국과 일본의 정책 차별성을 설

명한다.[13]

반면에, 한국의 정책 차별성을 일본과 비교하지 않고, 역대 한국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주목하는 연구는 한국의 각 정부마다 국내 및 국제정치 상황의 차별성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한국이 미국과의 미사일방어협력을 거부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변수에 집중하며 체제요인을 가장 큰 변수로써 설명하고자 한다.[14]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비교를 통한 연구와 한국 정부 내에서의 비교연구가 가지는 한계점을 보완하는 연구를 진행하고자한다. 먼저, 일본과의 비교를 통해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방어 협력요구를 거부한 이유를 설명하는 연구는 미국의 미사일방어 체제가 변화하면서 가지는 협력 요구의 특성변화에 대해 간과하고 있다. 미국정부는 각 정부마다 저마다의 미사일방어정책을 추진하였고, 레이건 정부시기의 SDI, 부시정부 시기의 GPALS, 클링턴 정부시기 TMD로 사업명과 성격을 달리해 왔다. 이러한 각기 다른 미사일방어 전략에 대해서 동일한 설명방식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일본과의 비교를 통한 해석은 결과 중심적인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의 정책 차별성에 집중하는 연구들은 실제로 정책 차별성이 드러났던 1990년대 후반기는 클링턴 정부의 TMD에만 집중함으로써, 이전 시기에 있었던 각 정부의 결정들을 간과하는 동시에 한국의 입장이 미국과의 미사일방어 협력에 대한 '일관된 거부' 입장임을 내포하고 있다. 하지만, 2019년도에 공개된 외교문서는 전두환 정부시기 한국이 레이건 정부와 SDI에 협력을 결정하였음이 나타나 있으며, 이는 한국이 '일관된 거부' 입장이 아니었으며, 내부적 수용에서 대외적 '거부'로의 변화가 존재하였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실은 일본과의 비교를 통해 제시한 '거부'결정의 요인들이 전두환 정부 시기에도 동일하게 작용하였지만 영향력이 없었음을 의미하며 이보다 더 영향력이 큰 변수가 작용하였음을 의미한다.

또한, 일본과의 비교연구는 연구시기가 거부결정이 이루어진 90년

---

13) 이재영. 2004. "미사일 방어와 동맹 :美國의 MD에 대한 韓.日간 인식 차이 분석". 연세대학교 대학원. 이현석. 2015. "한국과 일본 미사일 방어정책 비교". 서울대학교 대학원.

14) 양혜원. 2021. "약소동맹국의 연루 회피 원인 분석 : 한국의 미사일 방어 정책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대 후반에 집중됨으로써, 정책을 결정하는 정책 결정자들의 성향변화를 간과하는 부분이 있다. 1983년 레이건 정부의 SDI부터 시작된 미국과의 미사일방어 협력 요구는 1990년대 후반기 까지 다양한 정책 결정자들이 존재했었고, 이들 개인의 성향변화가 수용성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배제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의 결정을 시기별로 비교한 연구에도 한계점은 존재한다. 먼저 해당 연구는 전두환 정부를 제외한 각 정부의 수용성을 모두 거부로 보고 있는데, 엄밀한 의미에서 전두환 정부에서 역시 공개적인 참여에 대한 발표가 없었기에 대외적으로는 유보적인 입장으로 봐야한다는 점이다. 전두환 정부는 비공개로 SDI협력 결정은 대외적으로 유보였음을 의미한다. 결국 종속변수인 수용성이 대외적으로 거부로 표출된 것은 김대중 정부에서 처음 있었으며, 이전의 한국의 선택은 수용도 거부도 아닌 '유보'적인 입장이었던 것이다. 그렇기에 이 연구는 종속변수가 '수용'입장인 전두환 정부와 당시의 동아시아 정세에 대한 변수를 지나치게 강조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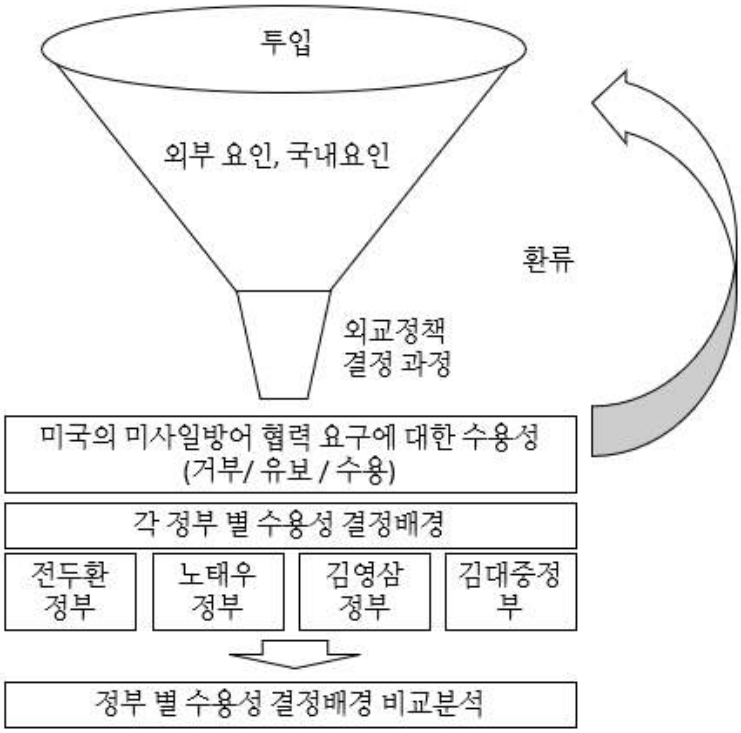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연구 방법에 있어서 한국의 각 정부별 비교방식을 취하고 한국정부의 미국의 미사일방어정책 협력요구에 대한 수용성의 종속변수가 전두환 정부에서부터 계속 '유보'적인 입장이었다가 김대중 정부에 들어 '거부'로 바뀌었음을 반영하여 기존연구를 보완하고자 한다.

4) 분석틀

본 연구의 분석틀을 도식화하면 아래 〈 그림-4 〉와 같다. 본 연구는 전두환 정부부터 김대중 정부까지 미국의 미사일방어 협력요구에 대한 한국 정부의 수용성 결정요인에 대한 비교연구 진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큰 틀에서 로즈노우가 제시한 외교정책 결정의 5가지 요인을 외부요인과 내부요인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또한, 위트코프 등 3인이 제시한 깔때기 모델을 적용하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4개의 정부 시기마다 반복되는 미국의 미사일방어 협력요구에 대한 한국의 수용성 결정과 그 요인들을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다. 미국의 미사일방어 협력요청은 각 정부 시기마다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고, 한국의 각 정부는 그때마다 변화된 환경요소들을 투

입하여 수용성 결정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확보된 각 정부들의 수용성 결정배경을 비교분석하여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 협력 요구가 유보에서 거부로 변화하게 된 결정요인을 밝히고자 한다.

〈 그림 2-1 〉 1983~1999 미국의 미사일방어 협력 요구에 대한 한국의 수용성 결정요인 분석틀



출처 : 케글리와 위트코프 등 3인(Charles Kegley, Jr. and Eugene Wittkopf)의 깔때기 이론[15]을 바탕으로 저자가 재구성

15) Kegley Jr, C. W., & Wittkopf, E. R. 1983. Beyond consensus: the domestic context of American foreign policy. International Journal, 38(1), 77-106.

(1) 독립변수, 종속변수, 핵심가설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미국의 미사일방어 협력요구에서 한국의 수용성을 결정하는 내·외부 요인으로, 구체적인 외부요인에는 냉전적 대결구도, 미국의 MD 협력 요구 수준, 중국의 美 MD 거부 압박,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이 있고 내부요인으로는 MD체계 구축의 재정 부담, MD체계의 군사적 필요성, 대북 포용정책, 한미 관계, MD에 대한 사회적 관심, 축소지향의 군사적 균형 추구가 있다. 이들 각 요소들을 사례연구에서 중요 요인들을 중심으로 서술하는 방식을 취했으며, 이는 미사일방어 협력 관련 논의가 정부별로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계속 달라지기에 변수가 광범위한 편이고,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지 않는 등 이슈 자체 성향이 계속해서 바뀐다는 점에 기인한다. 또한, 비문화 되는 군사업무의 특성상 현실적인 자료획득의 어려움이 한계로 작용하여 한계 안에서 파악가능한 주요 요인들을 위주로 결정배경에 대한 요인 분석을 실시한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미국의 미사일방어 협력 요구에 대한 한국의 수용성'으로 대외적으로 참여결정을 내린 경우를 '수용'으로 대외적인 발표가 없는 경우를 '유보'로 대외적으로 거부결정을 내린 경우를 '거부' 3가지 수준을 상정하였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통해 본 연구가 상정한 핵심가설은 다음과 같다.

H1. 미국의 미사일 방어 협력 요구에 대한 한국정부의 수용성이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정부에 걸친 '유보'적 입장에서 김대중 정부 시기 '거부'적 입장으로 변화된 핵심 결정 요인은 '대통령 개인 요인' 때문이었을 것이다.

(2) 연구범위와 연구방법

본 연구의 연구 범위는 미국으로부터 SDI 협력요구가 있었던 1983년부터 김대중 대통령이 대외적으로 미국과의 미사일방어 협력 요청에 거부를

천명한 1999년까지이다.

조지(Alexander George)와 베넷(Andrew Bennett)은 단일 사례 연구에 있어서의 과도한 일반화와 선택 편향을 제거하는 대안으로 최대유사사례(most-similar case)[16] 연구 방법을 제시하였는데, 본 연구를 이를 적용하여 시기에 대한 과정추적(process tracing)을 통해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각각의 변수들의 작용을 면밀히 조사하고자 한다.

더불어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1차 자료를 기반으로 미국의 미사일 방어 협력요구에 대한 한국의 수용성 결정요인들을 살피고 이를 통해 확보한 기조를 바탕으로 2차 자료를 통해 보강토록 하겠다. 연구에 쓰이는 1차 자료로는 미국의 국무부 및 국방부 자료, 백악관 발언, 주요 정책결정자의 회고록, 한국의 기밀 해제된 외교문서, 국회 회의록, 국방백서, 대통령 연설자료, 대통령기록물, 정부 부처 자료들을 활용한다.

16) Shanelle Van, Ballistic Missile Defense in Japan: Process-Tracing a Historical Trajectory, (Durham North Carolina: Duke University, 2014), pp.5-9.

Ⅲ. 사례연구
: 1983년 ~ 1999년 미국의 MD 협력 요구에 대한 한국의 수용성 결정요인

1. 미국의 SDI 계획과 전두환 정부의 비공개 참여

1) 데탕트의 후퇴와 레이건 정부의 SDI 계획

탄도미사일방어(BMD : Ballistic Missile Defense)어 대한 개념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소련간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의 양적 우위를 확보하고자 하는 경쟁 과정에서 상대방의 핵 공격에 대한 반격능력을 보장에 대한 필요성이 주목받으며 생겨났다. 미국과 소련은 미사일에 대한 양적우위 확보와 더불어, 자국의 핵심지역을 방어하는 탄도미사일 요격 기지를 설치하는 경쟁을 지속했었다.[17] 하지만, 70년대에 들어서면서 생긴 데탕트 분위기와 함께, 요격체계의 개발 및 설치 경쟁이 미소간의 핵 균형을 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게 되었고, 1972년 미국의 닉슨 대통령과 소련의 브레즈네프 서기장은 탄도탄요격미사일(Anti-Ballistic Missile : ABM)조약을 체결하여 미사일요격체계 개발을 자제하고자 했다.

하지만, 1979년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으로 변화하기 시작한 국제정세는 80년대에 들어와 데탕트 체제의 후퇴를 가져오며 새로운 냉전 체제의 성격을 보이기 시작한다. 1980년 대선에서 승리한 공화당의 레이건 대통령은 힘의 우위에 입각한 대소 강경정책을 추진하였고,[18] 미사일방어 분야에서도 큰 변화를 시도한다.

---

17) Hildreth, S. A. (2007, January). Ballistic missile defense: historical overview. LIBRARY OF CONGRESS WASHINGTON DC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18) 박경서,“한국외교의 시련과 도전:신냉전 질서속의 한국외교의 회고,”「정경문화」 (1983.12),p.103

1983년 3월 23일 레이건 대통령은 소련의 탄도미사일을 발사 및 비행 단계에서 파괴하여 소련의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미국의 전역을 방어하겠다는 전략방위구상(Strategeic Defense Initiative : SDI)을 발표한다.[19] 미사일방어 분야에서의 미국의 우위를 위해 군비확대 노선을 취하기로 한 것이다. 전략방위 구상은 SBI(Space-Based Intercepter)라는 요격체계를 구축하여 우주공간에 충돌파괴(hit-to-kill)요격 장치를 배치하여 소련의 탄도미사일을 발산단계 및 비행단계에서 제거한다는 계획이었다.[20] 소련에서 미국을 향해 핵 탄도미사일 발사하더라도 미국 본토에 도달하기 전 우주에서 요격하고 미 본토의 안전을 지킨다는 레이건 정부의 계획은 대중의 큰 지지를 얻었지만, 계획의 실현을 위해서는 많은 예산과 기술을 필요로 했고, 미국은 이를 위한 협력을 위해 동맹국들에게 참여를 요구하게 된다.

2) 전두환 정부의 참여검토와 참여결정의 비공개

한국은 1985년 3월 27일 캐스퍼 와인버거(Casper Weinberger) 미국 국방부 장관의 서한을 통해서 SDI 참여를 공식으로 요청받는다.[21] 그 이후 1985년 6월 18일 미국의 SDI 특별 설명단이 한국을 방문하여, 기자회견을 가지고 한국의 정부와 민간 기업의 SDI 참여를 요청하는 한편, 1986년 7월 29일에는 레이건 정부의 군축담당 특별보좌관인 라우니 대사가 한국을 방문하여 SDI 참여를 요청하면서 다수의 SDI 참여 요청이 이루어지며, 전두환 정부는 미국의 요청을 수용할지를 검토하게 된다.

전두환 정부는 미국의 요청을 검토한 과정을 기밀 해제된 문서를 통해 알 수 있다. 1986년 12월 17일 국방부 보고로 작성된 대통령 각하 지

---

19) US Government Office, The President's Strategic Defense Initiative,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January 3 1985), p.10, Ronald Reagan Presidential Library & Museum, "Foreword Written for a Report on the Strategic Defense Initiative"

20) 이철현. “미국의 MD전략과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리서치 아카데미논총 제4권 (2001).

21) Richard D. Fisher, "The Strategic Defense Initiative's Promise For Asia", The Heritage Foundation Asian Studies Center Backgrounder No.40, (December 18, 1985), p.7.

시사항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있다.[22]

> *"참여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우선 조사단을 파견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 되겠다. 우리의 기여수준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인지 일본이나 EC와 같이 기술이전에 있어 동등한 요구를 할 수 있을 것인지 등 협상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공식입장을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 미 국방장관 협상에 대한 국방장관의 회신내용에도 조사단을 파견한다는 것과 SDI에 대한 설명 청취를 원한다는 것을 포함하도록 검토 바란다. 우리가 참여할 시는 아무래도 일부 개발비를 부담하게 되는데 우리가 부담하는 만큼 실질적 참여가 가능할 것인지 즉 비밀분야에까지 접근이 가능할 것인지 등 자세히 알아보아야 한다. 돈을 적게 내도 선진국과 꼭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SDI 계획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민간차원에서 참여함이 바람직하다. 참여수준은 우리 국력에 맞게 해야 하며 우리의 부담범위를 사전에 파악해야 한다. 과기처와 협조 우리의 과학두뇌로 조사단 을 구성하고 모두가 통역 없이 의사표시 할 수 있어야 한다. 국방부가 주관하되 외무부의 조약전문가도 조사단에 포함 바란다. 특히 동건 보안에 유의 바란다."* [23]

위 문서를 통해 전두환 대통령이 SDI 참여를 결정하기 위해 고려했던 사항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전두환 대통령은 한국의 국력 수준에 맞게 참여하고 개발비의 부담액이 적다라도 선진국 수준의 기술이전 및 비밀공유 가능성을 주로 고민했다. 또한, SDI계획 참여 주체를 민간 차원에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이후 전두환 정부는 국방부 주관의 민간 조사단을 편성하여 1987년

---

22) 외교부 외교사료관, 2019년 비밀·비공개 해제문서 "미국 SDI(전략방어계획) 참여, 1985-88. 전6권 제1권 한국의 참여 검토, 1985" 등록번호 26669 (검색일: 2022년 5월 25일)

23) 외교부 외교사료관, 2019년 비밀·비공개 해제문서 "미국 SDI(전략방어계획)참여, 1985-88, 전6권 제2권 한국의 참여검토 1986-87" 등록번호 26670. (검색일: 2022년 5월 25일)

3월 29일 SDI 계획에 대한 미국 측의 설명을 듣기 위해 방문하였다.[24] 조사단의 단장이었던 국방과학연구소 부소장이었던 구상회 박사와 단원들은 SDI 계획이 안보문제 뿐 아니라 미래 과학기술 확보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았으며, 미국의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지속 추진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한국의 소재 및 전자 통신 분야의 연구기관이 참여함으로써 기술획득 측면에서 SDI 참여가 바람직하다고 보았다.[25]

이후 1987년 11월 1일부터 2주간 이루어진 기술조사단의 2차 조사가 이루어졌다. 조사단은 한국이 SDI 계획의 주 계약자로 참여하는 것이 과학기술 수준의 부족으로 제한된다고 보았다. 하지만, 하청 형식으로 전자 · 컴퓨터 · 통신 · 소재 분야에서 참여할 수 있고, 필요시 공동 투자 형태로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추진에 있어서 민간기업을 주도로 조용히 추진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SDI 계획을 군 차원에서 추진할 경우, 소련 등 공산국가들과의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주어, 다음해 서울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에 걸림돌이 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었다.[26]

한국이 SDI 계획에 참여를 결정함에 있어 무엇을 고려하였는지에 대해, 86년 있었던 전두환 대통령의 지시사항과 87년 이루어진 두 차례의 조사단의 보고서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전두환 이후 시기의 미국의 MD 협력 요구에 대해 한국이 무엇을 고려하는지에 대해서도 주목할 만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전두환 정부는 이후, 1988년 1월 12일 장관회의와 1988년 1월 29일 안건에 대한 승인을 득하여, SDI 계획에 참여함을 결정한다.[27] 전두환 정부는 국방부 장관의 명의의 서한을 통해 미국에

24) 외교부 외교사료관, 2019년 비밀·비공개 해제문서 "미국 SDI(전략방어계획) 참여, 1985-88, 제4권 제1차 SDI 조사단 미국 방문" 등록번호 26672. (검색일: 2022년 5월 25일)

25) 외교부 외교사료관, 2019년 비밀·비공개 해제문서 "미국 SDI(전략방어계획) 참여, 1985-88, 제6권 제2차 SDI 조사단 미국 방문", 등록번호 26674. (검색일: 2022년 5월 25일)

26) 외교부 외교사료관, 2019년 비밀·비공개 해제문서 "미국 SDI(전략방어계획) 참여, 1985-88, 제6권 제2차 SDI 조사단 미국 방문", 등록번호 26674. (검색일: 2022년 5월 25일)

27) 외교부 외교사료관, 2019년 비밀·비공개 해제문서 "미국 SDI(전략방어계획) 참여, 1985-88, 제3권 한국의 참여 검토 결과" 등록번호 26671. (검색일: 2022년 5월 25일)

SDI 참여에 대해 통보하지만, 공개적으로 SDI 참여를 알리는 것은 1988년 서울 올림픽 이후로 결정하게 된다.[28] SDI 참여가 자칫 공산국가를 자극하고 서울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는 조사단의 생각을 반영한 것이다.

결국, 전두환 정부의 미국과의 미사일방어 협력 요구 수용성은 내부적 수용과 대외적 유보로 정리할 수 있다. 미국과의 SDI 협력 요구를 내부적으로는 참여결정을 내렸지만, 성공적인 서울올림픽 개최로 인한 SDI 참여 결정의 비공개는 대외적으로 미국의 요청에 수용도 거부도 아닌었던 것이다.

3) 전두환 정부의 SDI 참여결정의 배경

(1) 동북아 신냉전 질서와 한미협력 강화

70년대 데탕트 분위기의 후퇴와 미국과 소련간의 신 냉전 질서의 확산은 미국과 소련의 이해가 얽힌 동북아에서도 나타났다. 다시금 찾아온 신냉전 질서는 한미일의 군사 대비태세 강화로 이어졌다. 대표적으로, 한국과 미국은 주변 정세와 북한의 도발 위협이 고조됨에 따라, 한반도에 발발하게 될지도 모르는 군사적인 도발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팀스피리트 연합 군사훈련을 시행하였고, 일본과 미국은 해상 군사 합동훈련을 실시하며, 소련에 대항하여 한·미·일 3각 안보 협력체제가 활발히 기능하던 시기였다. 한편, 소련은 SS-20미사일 등을 한국과 일본을 겨냥하여 동부시베리아에 배치하는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군사적 전력을 강화하며, 동북아시아에 신 냉전질서가 구조적으로 정착되던 시기였던 것이다.[29]

동북아는 한·미·일 3각 안보협력체제와 소련·북한의 군사적 대응이 부딪히는 신 냉전의 중심 무대였으며[30] 미국은 한국을 소련의 견제를 위해

---

28) 외교부 외교사료관, 2019년 비밀·비공개 해제문서 "미국 SDI(전략방어계획) 참여, 1985-88, 제3권 한국의 참여 검토 결과" 등록번호 26671. (검색일: 2022년 5월 25일)

29) 홍현기,「변화하는 국제정세와 남북관계의 전망」(서울:태백,1988),pp.71～74.

30) 김석용. 2005. "한국의 대미 외교정책에 관한 연구-역대 정권의 외교정책 변화를 중

중요한 방위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었다. 전두환 대통령과 레이건 대통령이 가졌던 3차례의 한·미 정상회담은 데탕트시기에서 신냉전 시기로 오면서 변화한 안보 파트너로서의 한국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먼저, 1981년 있었던 정상회담은 공동성명을 통해, 이전 카터정부에서 논의되었던 주한미군의 철수가 공식적으로 철수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한국 참석 없이 북한과 접촉하지 않음을 분명히 하며, 레이건 이전 시대의 양국 관계의 서먹함을 청산하고 새로운 우호 관계를 정립하였다. 이후 1983년 11월 정상회담에서는 방한 직전 KAL기 여객기 피격사건과 미얀마 랭군 폭발테러사건 등으로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이루어졌다. 여기서 레이건 대통령은 북한 공산집단의 점증하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미군의 전력을 증강하고, 한국군의 전력증강에 필요한 무기체계와 기술을 계속 제공할 의사를 밝히며, 양국이 강력한 안보협력의 동반국이 될 것을 천명한다. 당시 공동성명 4항은 "대한민국의 안전이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주축이 되어 나아가 미국의 안전에 직결" 된다[31]는 표현이 사용되면서 한국 방위에 관한 의견의 일치와 미국의 구체적 실천 약속을 동반하였다.[32] 이후 1985년 있었던 레이건과의 정상회담에서는 주한미군을 포함한 양국의 전쟁 억제 노력이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안전은 물론 미국의 안전에 직결된다는 인식을 확인하며, 북한의 군사적 도발위협에 대한 한미 공동대처방안, 남북대화문제 등의 안보문제의 논의가 되었다.

레이건 대통령과 정두환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보듯, 당시의 신냉전 질서는 한국과 미국의 협력을 이전보다 강화하였다. 이시기 자행된 높은 북한의 대남도발은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다수가 발생하였고, 특히 KAL기 폭파와 아웅산 묘소에 대한 폭탄테러는 정상회담에서 언급되며 한미가 북한의 도발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미국이 한국군의 전력증강 및 무기체계의 기술확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전두환 정부 당시의 신냉

심으로" (Doctoral dissertation, 조선대학교 대학원).

31) 외교부,「한국외교 40년」(서울:외교부),p.140.

32) 당시 미국은 한국군의 전력 증강에 대한 지원을 명문화함으로서 FMS의 상환조건 이자율 금액 등에 대해 미국 정부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시사하였으며,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구체적인 과업으로 남북 대화와, 한국의 UN가입에 대한 미국의 지지가 명시되었다.

전 질서와 한미간의 안보협력 강화, 그리고 북한의 극심한 도발은 한국이 미국과의 미사일방어체제 협력의 수용성을 결정함에 있어 긍정적인 촉매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2) 극심한 북한의 대남도발과 예산 부족으로 인한 전력 획득의 우선순위

전두환 정부시기 북한의 대남도발은 6.25 전쟁 이후 절정에 이르던 시기였다.[33] 북한은 10회의 지상 및 해상 무장공비 침투사건이 있었고 이중에서도 83년과 87년에 있었던 아웅산 묘소 폭탄 테러와 KAL기 폭탄 테러는 국내 정치적 충격과 파장이 굉장히 컸다. 당시 북한의 대남 도발과 테러의 큰 목적 중 하나는 분단된 남과 북을 적화통일 하고자 함임을[34] 고려하였을 때, 북한의 도발과 혹시 모를 전면전에 대비가 시급한 시기였다. 특히 아웅산 테러사건은 전두환 정부가 탄도미사일 개발 계획을 다시 시작하는 계기로서 작용하였다. 아웅산 테러로 장관급 국무위원 16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하자, 북한의 도발을 응징하기 위한 자체적인 지대지 미사일을 가지고자 하였고, 이전에 중단시켰던 백곰을 개량하여 현무 지대지 미사일을 개발하게 된다. 이렇게 개발된 현무는 1986년 개발에 성공하여 양산에 들어가며[35] 전두환 정부가 미사일 방어보다는 응징전력 확보에 노력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

33) 姜昌國. 2010. 6· 25 전쟁 이후 북한 대남도발 현황과 과제: 연대별 · 집권정부별 사례를 중심으로. 군사, (75), 295-330.

34) 김선일. (2012). 북한의 대남 테러리즘에 관한 고찰. 군사연구, (133), 279-307.

35) 행정안전부국가기록원, “국방과학”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국방과학” http://theme.archives.go.kr/next/koreaOfRecord/natlDefense.do(검색일: 2022년 5월 25일)

전두환 정부 당시 사용된 방위력 개선비의 목적을 보면, 한국 정부가 이 시기 새로운 무기체계 도입을 위한 예산의 우순순위를 어떻게 두었는지 알 수 있다.

〈 표 3-1 〉 1980~1988 방위력 개선비와 사용 목적

시기	방위력 개선비	사용 목적
80년	8,428억	노후장비 교체, 전방지역 진지 축성, 고속정 건조, 공기(F-4) 구매
81년	1조 296억	
82년	1조 1,793억	자주포, 한국형전차, 장갑차 개발, 주요 전투함정 건조, F-5 전투기 기술 도입 생산
83년	1조 2,729억	
84년	1조 3,740억	
85년	1조 6,363억	
86년	1조 8,577억	
87년	2조 432억	전차, 장갑차, 자주포 양산 헬기, 잠수함, F-16 전투기 도입
88년	2조 4,376억	

출처 : 국방부, 『1988 국방백서』, (국방부, 1988)

당시 한국은 노후장비를 교체하고, 자주포, 장갑차, 전차, 전투기 등 북한과의 전면전에서 압도적 승리를 장담할 수 있는 재래전력 확보에 크게 치중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축비용이 굉장히 큰 미사일방어 능력을 확보하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 표 3-2 〉에서 보듯 당시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 표 3-2 〉 1970~1986 북한의 미사일 개발 일지

시기	내용
1970년	중국의 미사일 개발계획 참여, 기술 획득
1976년	소련제 SCUD-B 역설계/개발
1984년	SCUD-B 미사일 최초 시험발사
1986년	SCUD-C 미사일 시험발사

출처 : 국방부, 『2012 국방백서』, (국방부, 2012)

하지만, 한국의 이러한 북한 미사일 개발에 대하여 미사일방어 전력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확실한 재래전력 확보에 집중하였다. 한국과 북한은 국경을 맞대고 있었고, 이러한 짧은 종심과 국경에서 서울까지의 짧은 거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수의 장사정포에 수도가 노출되는 지리적 여건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술상황 속에서 자체적인 미사일방어체계 개발은 어려운 실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부족한 예산과 국경과 인접한 서울의 위치는 미국과의 미사일방어 협력의 필요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며, 협력 수용성에서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3) 전두환 대통령의 긍정적 對美 이미지와 북한에 대한 높은 위협인식

전두환 대통령은 미국에 대한 우호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전두환이 졸업한 육군사관학교에서의 생활은 그의 사고와 인식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는데, 미국의 웨스트포인트를 모델로 한 사관학교에서의 경험은 우호적인 대미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그는 군에서 대위 시절 미국과의 군사교류 프로그램인 레인저 코스를 수료하였는데,[36] 당시 한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강대국인 미국과의 선진 군사교육 경험은 전두환으로 하여금 미국을 긍정적인 우방으로 인식하게 했을 개연성이 있다.

또한, 전두환 대통령은 비민주적인 방법으로 정권을 장악하였지만, 미국과 굉장히 돈독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였다. 취임이후 가졌던 레이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한 미국과의 안보협력 강화는 전두환의 대통령으로서의 부족한 정당성과 정통성을 단번에 채울 수 있었다. 미국은 자국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거나, 정치적으로 필요한 국가의 경우 국내 정치적으로 간섭하려 들지 않기에,[37] 정통성이 부족한 전두환 입장에서 반미 노선을 선택할 개연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전두환 대통령으로서의 부족한 정통성은 미국과의 미사일방어체제 협력 수용에 긍정적인 촉매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두환 대통령은 굉장히 현실주의적인 인식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전두환의 대통령 시절 발언을 통해 그의 국제사회에 대한 인식을 볼 수 있다. 그는 “강한 벗을 지니기 위해서는 우리자신이 강해져야 하며, 약자에게는 강한 벗은 물론 약한 벗도 없게 되는 것이 냉엄한 국제사회의 현실”이라고 말하며, 국제정치가 힘을 중심으로 작동한다는 현실주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38] 이러한 국제사회에 대한 전두환 대통령의 시각은 초강대국을 미국과의 협력을 긍정적으로 보는데 일조했을 것으로 보인다.

---

36) 오일명,「독재자 박정희와 전두환의 비교연구」(서울:현대공론,1988),p.168.
37) 송영우,「한·외」,p.115.
38) 최종기,「한국외교정책」 (서울:한국국제관계연구소,1988),p.52.

전두환 대통령이 미국에게 가졌던 긍정적인 이미지와 더불어, 그는 북한에 대한 높은 수준의 위협인식을 보여주었다. 매년 10월 1일에 있었던 국군의 날 연설은 전두환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시각을 잘 보여준다.

"아물지도 않을 상처를 남긴 이번 대한항공여객기의 피격 추락사건을 통해 강자의 논리만이 통용되는 국제정치의 냉혹함을 다시 한번 깊이 인식하게 되었읍니다. 또한 힘의 뒷받침이 없는 평화와 안전은 한낱 허구에 불과하다는 뼈저린 교훈을 얻게 되었읍니다. (중략) 특히 북한공산주의자들은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을 만큼 호전적인 폐쇄집단이며, 예측이 불가능한 비이성적 집단인 것입니다. 저들은 지금 국제사회에서의 평판이나 지위가 우리 대한민국에 비해 결정적인 열세에 몰려 있고, 족벌세습체제구축을 둘러싼 내부갈등과 경제적 곤경으로 초조해진 나머지 자멸을 각오하고 대남전쟁 도발의 모험을 저지를 가능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읍니다. " [39]

"북한공산집단은 최근 전략기동부대를 증편하고 기계화군단과 기갑군단, 그리고 포병군단을 창설하는 등 공격전력을 대폭 증강하여 전진배치함으로써 언제라도 기습남침을 감행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은 지난해 남북대화를 일방적으로 중단시킨 채 거짓 평화공세를 펼치고 있으나, 이것은 모두 우리의 안보태세이완을 노리면서 일부 극열세력의 반체제책동을 선동편승하여 우리의 내부혼란과 분열을 조장함으로써 침략의 구실을 찾으려는 흉계를 숨겨 놓고 있는 것입니다." [40]

전두환 대통령은 북한을 '언제라도 기습 남침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없는 '비이성적 집단'으로 보고 있었다고 할 수 있겠다.

39)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제35주년 국군의 날 담화" (1983.10.01) https://www.pa.go.kr/research/contents/speech/index.jsp (검색일 : 2022년 5월 25일)
40)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제38주년 국군의 날 담화" (1986.10.01) https://www.pa.go.kr/research/contents/speech/index.jsp (검색일 : 2022년 5월 25일)

이러한 전두환 대통령 개인의 미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와 북한에 대한 높은 위협인식 수준은 미국과의 미사일방어체제 협력에 긍정적인 촉매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2. 탈냉전에 따른 국제정세 변화와 노태우 정부의 SDI · GPALS 유보

1) 탈냉전으로 인한 미국의 미사일방어 전략 변화와 한국의 참여 유보

1990년대를 전후하여 국제정세 급속히 탈냉전으로 인한 변화가 시작되었다. 바르샤바조약기구는 80년대 후반부터 약화되었다. 동유럽 공산 정권들이 하나둘 몰락하면서 동유럽 국가들의 탈퇴가 이어졌고 독일을 통일을 이룩하면서 나토의 일원이 되었으며, 1991년 12월 소련 연방 체제마저 와해되면서, 바르샤바 조약기구는 유명무실해진 것이다. 이러한 정치적 변화는 과거 미국과 소련 양극을 중심으로 하였던 세력 구도가 의미를 잃게 되었으며, 구소련에 의한 서방기습과 그에 대한 지구 전면전을 염두한 전략 개념의 전면적인 수정을 요하게 되었다.

탈냉전으로 인한 새로운 전략 환경은 미사일방어에 대해서도 새로운 안보전략을 요구해옴과 동시에 1990년부터 91년 부시정부의 걸프전쟁에서의 경험은 소련 이외의 잠재적 적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해 대비할 필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41] 레이건 정부에서 소련으로부터의 대규모 핵공격에 대해 대비하기 위해 추진된 기존의 전략방위 구상은 변화가 필요했다. 전략방위 구상은 우주공간에서 적 미사일을 요격한다는 작전개념과 더불어, 지향성에너지무기(DEW: Directed Energy Weapons), 운동에너지무기(KEW: Kinetic Energy Weapons) 등 당시의 기술수준으로 구현이 어려웠고, 레이건 행정부 말기로 접어들면서 미국 정부의 예산 삭감이 이루어지면서[42] 현실적인 조정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부시정부는 새로운 전략 환경에 맞는 미사일방어 전략으로 '제한 공격에 대한 지구 전역 방어 (Global Protection Against Limited Strikes : GPALS)를 제시한다. GPALS는 소련의 붕괴 이후에도 북한이나 리비아 같은

41) Department of Defense, "The President's New Focus For SDI: Global Protection Against Limited Strikes(GPALS)", (SDIO, The Pentagon, Washington, DC 20301, Janurary 6, 1991), pp.1-3.

42) Baucom, Donald R. 2004, "The Rise and Fall of Brilliant Pebbles," The Journal of Social, Political, and Economic Studies, Vol. 29, No. 2: 143-190.

잠재적 위험국에 대한 탄도미사일 위협을 작전개념에 반영하고자 하였고, 이는 전구미사일방어(Theater Missile Defenses : TMD)와 국가미사일방어(National Missile Defence : NMD)로 구체화 되었다. TMD의 경우 해외 주둔 미국과 미국의 사활적 이익지역을 보호하고자 하였고, NMD의 경우 적국과 불량국가들이 미국 본토를 향해 발사한 미사일에 대비하고자 했다. 이러한 미국의 GPLAS 계획은 1991년 1월 30일 미 국방부를 통해 발표되었고, 같은 해 미사일방어법이 통과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43]

미사일방어의 전략개념을 수정한 부시정부는 1992년 GPALS 기획단을 한국에 파견하면서 한국에게 GPALS 계획에 참여를 요청한다. 1992년 5월 30일 보도된 뉴스에 따르면, 월풀 국무부 정치군사국 부차관보가 단장을 맡아 8명의 GPALS 기획단이 방한하였으며, 한국의 당국자들에게 패트리어트 제조 기술, 미사일 발사 탐지 감응 장치 등의 기술 이전을 약속하며, 한국과 미국의 50대 50의 지분참여를 요청하였다고 한다. 기사는 북한의 핵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한국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미국이 한국에게 우선적으로 요청하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었다.[44] 과거 SDI 계획이 소련의 공격으로부터의 한국의 공동 대응을 요구하는 것이었다면, 변화된 GPALS 계획은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한 염려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노태우 정부는 이러한 미국의 GPALS 참여 요청을 충분히 검토할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함과 동시에 GPALS 계획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인지에대한 우려가 존재했다고 할 수 있다. GPALS 기획단이 한국을 방문한 것은 1992년 5월이고, 이후 1992년 11월 3일 제 42대 대통령 선거에서 부시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하고 클링턴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것이다. 당시 외무장관이었던 이상옥은 외교회고록에서 미국 선거에서의 클링턴의 당선으로 분위기가 변화된 부분이 존재함을 언급한다.[45] 노태우 대통령 또

---

43) 1991년 통과된 미국의 미사일방어법은 GPALS의 목적을 3가지로 제시한다. 첫째, 제한된 탄도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미국을 방어하기 위하여 요격을 위한 우구지기를 전개한다. 둘째, 전략적인 안정상태를 유지한다. 셋째, 해외 주둔 미군과 우방국들에게 효율적인 미사일방어 체계를 제공한다.

44) 『MBC 뉴스』 1992년 5월 30일 https://imnews.imbc.com/replay/1992/nwdesk/article/1915901_30556.html (검색일: 2022년 5월 25일)

45) 이상옥, 『전환기의 한국외교 이상옥 전 외무장관 외교회의록』, (서울: 도서출판 삶과 꿈, 2002), pp.404-405.

한 GPALS에 대한 참여 요청을 받은 후 남은 임기가 9개월 정도였으므로, SDI 계획이 검토되던 기간이 굉장히 길었던 것을 참고했을 때, GPALS에 대한 수용성 결정이 노태우 정부에서 이루어지기 어려운 여건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에 다음 장에서는 주로 미국의 SDI 계획에 참여하기로 하였고, 올림픽 이후참여여부를 공개하기로 하였던 한국 정부가 SDI에 대한 '유보'로 번복을 하게된 배경에 대해서 주로 논하도록 하겠다.

2) 노태우 정부의 SDI, GPALS 유보결정의 배경

(1) 탈냉전기의 평화 분위기와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

냉전이 끝나고 변화하는 외교·안보 환경 속에서 노태우 정부가 가장 구체적으로 추진했던 대응은 '북방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노태우 정부 출범 초기였던 1988년 있었던 7·7 선언(민족 자존과 통일 번영을 위한 대통령 특별선언)은[46] 기존의 냉전구조에서 벗어나 북한을 포용함으로써 남북관계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했던 한국 정부의 전략이 잘 드러난다. 7·7 선언은 이후 서울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해 기여했으며, 다음해 발표된 통일정책인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밑바탕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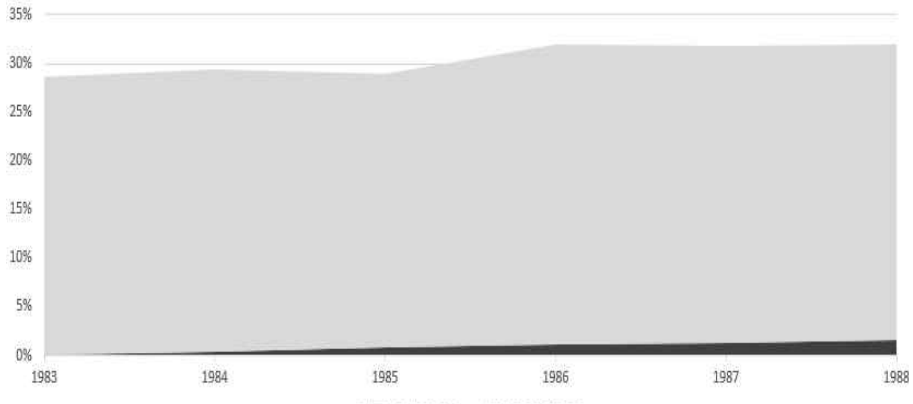
서울올림픽 이후 노태우 정부는 소련, 중국, 동유럽 공산국가들과의 외교관계를 적극적으로 수립하였다. 1989년 헝가리와 최초로 외교관계를 맺은 이후, 체코슬로바키아, 루마니아, 폴란드 등의 동유럽 국가들과 공식적인 외교관계가 수립되었다. 이후 1990년 9월 30일 소련과 외교관계를 수립한

46) 7·7선은은 6개 정책을 제시하였다. 1) 정치, 경제, 종교, 문화, 체육, 학자 및 학생의 남북 동포간 상호교류 적극 추진 및 해외동포들의 자유로운 남북한 왕래 2) 이산가족 상봉 주선 및 지원 3) 남북한 교역의 문호 개방 4) 남북한 균형발전 및 북한의 비군사적 물자 교역 인정 5) 남북한간 대결외교 종교 및 공동이익을 위한 협력 6) 북한의 미국 및 일본과의 관계 개선 협력, 한국과 소련 및 중국 등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 https://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2874&pageFlag=&sitePage=1-2-1 (검색일: 2022년 5월 25일)

데 이어 1992년 8월 24일에는 중국과도 수교하게 되면서[47] 공산권 국가들과의 적대적 관계를 탈피하데 집중한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중국과 한국과의 '선린우호'로의 관계 격상은[48] 양국의 무역량을 폭발적으로 증가시켰고, 전두환 정부 시기 미국 중심의 무역구조에 변화가 발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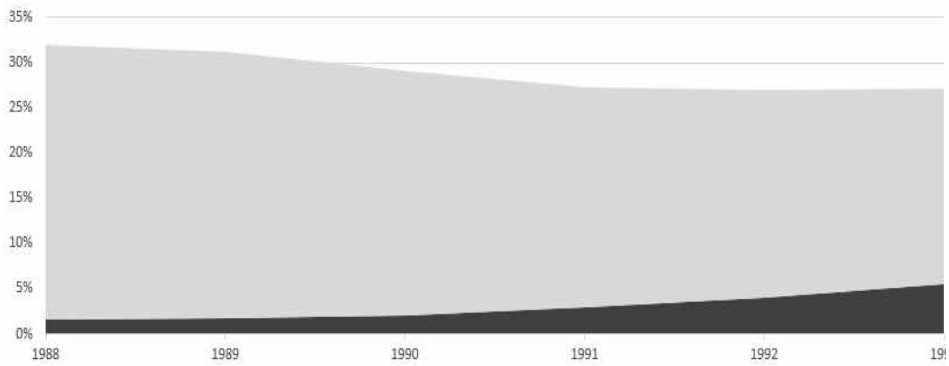
〈 그림 3-1 〉 1983 ~ 1988 한국의 무역 의존도



註 : 검정색 부분은 한국의 대중 무역 의존도를 의미
회색부분은 한국의 대미 무역 의존도를 의미
출처 : 한국 무역협회 통계를 토대로 필자가 정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60&tblId=DT_1R11006_FRM101&conn_path=I3 (검색일 : 2022년 5월 25일)

47) 이원형, "한국외교의 국내외환경" 『이명박 정권의 외교전략 한국의 국가전략』, (서울: 박영사,2008), pp.117.
48) 이원형, "한국외교의 국내외환경" 『이명박 정권의 외교전략 한국의 국가전략』, (서울: 박영사, 2008), pp.118.

〈 그림 3-2 〉 1988 ~ 1993 한국의 무역 의존도



註 : 검정색 부분은 한국의 대중 무역 의존도를 의미
회색부분은 한국의 대미 무역 의존도를 의미
출처 : 한국 무역협회 통계를 토대로 필자가 정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60&tblId=DT_1R11006_FRM101&conn_path=I3 (검색일 : 2022년 5월 25일)

〈 그림 3-1 〉은 이 보여주는 한국의 무역에서 미국과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두환 정부 시기 한국의 외교 파트너가 미국 일변도였다는 점과 더불어, 무역 파트너 또한 미국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음을 보여준다. 〈 그림 3-2 〉의 노태우 정부시기 한국의 무역 의존도는 노태우 정부가 공산권 국가들과의 수교 이후 교역국가가 다변화 되었으며, 특히 중국과의 교역량이 폭발적으로 느는 결과로 이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이 국제적인 안보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는 것임과 동시에 무역구조의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었음을 보여준다.

노태우 정부는 동유럽과 소련 길고 중국과의 관계개선 뿐 아니라 북한과의 관계도 개선하고자 하였다. 소련과의 수교 이후 3차례의 한국과 소련의 정상회담은 소련이 한국의 UN 가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게 되었고, 이후 중국이 한국의 UN 가입을 지지하는 국제적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1991년 9월 17일 제 46차 유엔총회에서 한국과 북한이 각각 16

1번째, 160번째로 UN의 회원국이 되었다. 이후, 노태우 대통령은 동월 24일 UN총회 연설에서 남북한의 평화협정 체결과 무력불사용, 한반도의 전쟁위협 감소를 위한 군사적 신뢰 향상, 남북한의 자유로운 통상, 통행, 통신의 보장을 강조하며,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3대 원칙을 제시하였다.[49] 노태우 정부의 북한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는 당시 작성되었던 국방백서에의 '주적'표현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1968년 이후 국방백서의 개정판을 오랫동안 발간해오지 않다가, 1988년 건국 40주년을 맞아 재 발간하게 된다. 노태우 정부 출범과 함께 발간된 1988년 국방백서에서는 북한에 대한 '주적' 개념이 사용되지 않았으며[50] 노태우 정부 내내 유지되었던 것이다.

이렇듯 공산권과의 관계 회복과 북한과의 평화통일을 논하던 시기에 소련의 대규모 핵 공격을 대비하는 SDI 참여를 전두환 정부에서 예정했던 대로 올림픽 이후,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올림픽 이후의 북방정책을 준비하던 노태우 정부에게 있어 국제정세 및 국내정책과 반하는 일이었다. 노태우 정부에서 SDI에 대한 공개적인 참여 선언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긍정적인 검토를 이어갔던 것으로 보인다. 1989년 과학 기술처의 한미 과학기술 협력 추진방향 문서에는 미국과의 연구 협력을 통해 전략방위구상 등 대형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추진방향으로 제시했었으며,[51] 같은 해 8월 미국 하원의 과학우주위원회의 방한에서도 한국과 미국이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많은 협력과 SDI 계획 추진에 있어서 양국의 공감대를 확인했기 때문이다.[52] 결국, 미사일 방어에 있어서의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공개적인 참여 발표가 없었던 배경으로 노태우 정부의 공산권과의 관계개선을 중심으로 한 외교다변화 노력이 작용했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49)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남북한 UN 동시가입(91.9)" https://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2878&sitePage(검색일: 2022년 5월 25일)
50) 국방부, 『1988 국방백서』, (국방부, 1988).
51) 외교부 외교사료관, 2020년 비밀·비공개 해제문서 "미국 하원 과학, 우주, 기술위원회 소속 의원단 방한, 1989-8.6-9", 등록번호 28163. (검색일: 2019년 3월 31일)
52) 외교부 외교사료관, 2020년 비밀·비공개 해제문서 "미국 하원 과학, 우주, 기술위원회 소속 의원단 방한, 1989-8.6-9", 등록번호 28163. (검색일: 2019년 3월 31일)

(2) 북한의 도발 빈도의 급격한 감소와 한국의 전력획득 우선순위

당시 북한은 이러한 탈냉전기의 평화분위기와 한국과의 관계개선에 호응하듯 분단이후 가장 적은 수준의 대남도발 양상을 보여주었다.

〈 표 3-3 〉 1980~1987 북한의 대남도발 양상

시기	대남도발 사례	비고
90년	제 4땅굴 발견	–
91년	한중 합작어선 납북 제2승영호 납북	
92년	서부전선 무장공비 침투 판문점 무장공비 침투 은하계곡 무장공비 침투 조선로동당 중부지역당 사건	

출처 : 국방부, 『1988 국방백서』, (국방부, 1988)

이것은 전두환 정부시기 보다 매우 낮은 빈도의 대남도발로 탈냉전으로 인한 평화분위기의 북한의 군사적 도발도 잦아들던 시기였음을 의미한다. 한국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전과 비슷한 수준의 방위예산을 전면전 준비 위주로 사용하였다.

〈 표 3-4 〉 1988~1993 방위력 개선비와 사용 목적

시기	방위력 개선비	사용 목적
88년	2조 4,376억	- 전차, 장갑차, 자주포 양산 - 헬기, 잠수함, F-16 전투기 도입
89년	2조 5,911억	
90년	2조 7,672억	
91년	2조 9,416억	
92년	3조 1,387억	
93년	3조 2,987억	

출처 : 국방부, 『1993 국방백서』, (국방부, 1993)

노태우 정부 시기 방위력 개선비는 매년 증가하였지만, 물가상승률을 반영할 경우 연도별로 마이너스 성장을 하였다. 한국군의 방위력 개선비는 탈냉전기에도 평이하거나 그것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고, 이러한 재정상황과 자금의 사용목적으로 보았을 때 체계 구축시 운용 효과를 장담할 수 없는 미사일방어 보다 대북 억제 효과가 확실한 무기체계 현대화에 집중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북한의 도발과 한국군의 방위력 개선 우선순위가 미국과의 미사일방어 분야 군사협력 수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전두환 시기는 물론 노태우 시기에도 미사일방어 체계 확보에 대한민국 국내적 필요성이 적다고 하더라도 기술획득 과 한미협력을 유인으로 비공개 협력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1989년 과학 기술처의 한미 과학기술 협력 추진방향 문서에서 보듯 미국과의 미사일방어 협력을 내부적으로 추진하는 것과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수용성에서의 '수용'은 대외적으로 공개된 수용이기 때문이다. 결국 국내 군사적으로 미사일방어체계에 대한 필요성이 낮은 것과 북한의 낮은 도발수준은 미국과의 미사일방어 협력 유인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지만, 한국의 수용성을 공개적인 '거부' 입장이 아닌 '유보'수준에 유지시키는 낮은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할 수 있다.

(3) 노태우 대통령의 '민족자존' 외교이념

노태우 대통령은 전두환 정부에서의 SDI에 대한 유보적 입장을 이어온 동시에 올림픽 이후에 대외적으로 발표하기로 했었던 지난 정부의 결정을 번복하여 SDI, GPAPLS에 대해 계속적인 유보 입장을 이어왔다. 여기서 주목해볼 부분은 노태우 대통령이 '수용'을 계획했었던 과거 정부의 계획을 '유보'로 번복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노태우 대통령의 선택의 배경으로 그의 민족자존을 추구했던 그의 외교이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노태우 대통령은 북방정책은 이전 정부보다 획기적으로 진보적인 정책이었다. 그가 추구했던, 북방정책은 미국을 한국 안보의 후원자로 보는 견해에서 벗어나 있었으며,[53] 남북한의 균형 발전, 남북연합과 민족 공동체 통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같은 획기적인 정책들은 군사정권의 연장선상에 있었다고 할 수 있는 노태우 정부가 탈냉전이라는 체제변화에 적응만을 이유로 설명하기에는 무척 진보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결국 노태우 대통령에게는 국제체제의 변화이외에도 '민족자존'의 외교이념이 정책을 이끄는 동력으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1987년 대통령 선거기간 중 방문한 존스홉킨스 대학의 강연에서, 한국 청년들의 반미 성향에 대한 질문을 받는데, 이에대하여 "그것은 반미가 아니라 잃어버린 자존심의 문제"라고 대답한다. 이러한 민족자존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이 노태우 정부가 북방정책을 추진하는 기본 철학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노태우 대통령의 취임사에는 변화하는 국제환경에 적응하여 민족생존을 이끌겠다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그러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건은 우리에게 결코 유리하지만은 않습니다. 냉전시대의 종식과 함께 세계는 실리에 따라 적과 동지가 뒤바뀌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경제전쟁, 기술전쟁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변화하는 세계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선진국의 문턱에서 주저앉고 말 것입니*

53) 김재홍, 1989. "노정권과 미국,불편한 관계인가,"「신동아」p.176.

다. 도약하지 않으면 낙오할 것입니다. 그것은 엄숙한 민족생존의 문제입니다.[54]

그는 세계가 실리에 따라 적과 동지가 뒤바뀌고 있으며, 민족의 생존을 위한 대처를 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민족자존을 내세울 것이며, 미국 일변도 외교를 지양하고 북방외교에 의한 외교 다변화를 통해 균형외교를 하고자하는 그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국군의날 연설에서는 그가 탈냉전기의 북한이 한계상황에 놓여있으며, 굳건한 안보태세를 갖춤과 동시에 새로운 화해의 질서를 기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북한의 폐쇄노선은 분명히 한계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남북한관계는 이제 중대한 전환기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전기를 평화와 통일로 이끌어야 합니다. 급격한 변화의 시기는 기회와 함께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굳건한 안보태세가 절대절명의 과제입니다. 이 세계에는 냉전체제가 종식되고 새로운 화해의 질서가 태동되고 있습니다." [55]

노태우 대통령의 이러한 북한에 대한 인식과 민족자존에 대한 철학적 바탕은 그의 '북방정책' 구상을 실현했던 실무자인 박철언 정책보좌관과 김종회 안보보좌관 그리고, 당시 북방정책의 주요 인물이었던 이상옥 외무장관에게서도 나타나는데 이들의 회고록과 인터뷰 에서는 미국 일변도의 외교에서 자율성을 획득하려는 의지와 민족 자주에 대한 열망, 그리고 당위에 가까운 통일 의지 등을 엿볼 수 있다.(노태우, 2011; 이상옥, 2002). 박철언(2005)이 보여준 북한에 대한 민족주의적 시각과, 김종휘가 보여준 용산기

54)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대통령입장및취임식사" https://www.archives.go.kr/next/search/showDetailPopup.do?rc_code=1310377&rc_rfile_no=200200000271&rc_ritem_no=000000000001&sitePage=0-0-0#viewer(검색일: 2022년 5월 25일)

55)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제37주년 국군의 날 담화" (1990.10.01.) https://www.pa.go.kr/research/contents/speech/index.jsp (검색일 2022년 5월 25일)

지 이전 및 평시작전통제권 환수 등은 민족주의적이고 자주적인 사고가 뒷받침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노태우 대통령의 ‘민족자존’의 외교이념은 당시 미국과의 미사일방어 협력에서 참여 결정에 대한 공개를 다시 ‘유보’로 돌려놓을만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3. 북한 핵 위기와 김영삼 정부의 TMD 유보

1) 클링턴 정부의 BMD계획과 김영삼 정부의 TMD 유보

부시 정부에서의 GPALS 계획은 클린턴 정부로 오면서 탄도미사일방어(Ballistic Missile Defense : BMD)로 구체화 된다. 1993년 5월 미국의 국방장관이었던 아스핀(Les Aspin)은 SDI 계획을 공식적으로 폐기 하면서, 탄도 미사일 방어의 중심의 지상요격으로 전환되었던 것이다. GPALS에서 구체화된 BMD는 부시정부의 GPALS와 유사하게 구성되었다. BMD는 전역미사일방어(Theater Missile Defense Initiative : TMD)와 국가미사일방어(National Missile Defense : NMD), 그리고 신기술프로그램(Advanced Technology Program : ATP) 세 가지로 구성되었으며, NMD와 TMD를 위한 지상배치 탄도 미사일 요격 체계에 중심을 두게 되었다.[56] 이러한 클링턴 행정부의 변화는 새 정부가 제시하는 새 정책인 측면이 있었으며, SDI에서 추구하였던 우주기지 요격체계가 국가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기술적으로 거쳐야 할 선행단계가 많다는 배경하에이루어진 변화라고 볼 수 있다.

1993년 9월에 발표한 클린턴 정부의 BMD 전면검토 계획은 현실적인 위험을 고려하여 본토를 방어하는 NMD 보다 TMD를 우선하기로 한다. TMD는 해외둔 미군 및 동맹국들에 대한 방어라는 현실적인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처하는 것을 중점으로 하였으며 이는 탈냉전기의 전략 환경 변화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이었다. TMD는 저고도를 방어하는 PAC-3와 NAD(Navy Area Defense), 고고도를 방어하는 THAAD(Terminal High Altitude Areda Defense)와 NTW(Navy Teater wide) 구성되는 다층 방어 체계로 구성되었으며 저고도 방어 체계부터 고고도 방어체계로 점진적으로 개발하고 배치하기로 하였으며,[57] 과거의 SDI와 GPALS 사업이 SDIO에서 신

---

56) Les Aspin Secretary of Defense, Report on the Bottom-Up Review, (U.S.A. Department of Defense, October 1993), pp.43-48

57) Les Aspin Secretary of Defense, Report on the Bottom-Up Review, (U.S.A. Department of Defense, October 1993), pp.44-47.

설기구인 BMDO에서 추진되고자 하였다.

클링턴 정부는 김영삼 정부에게 TMD 사업에 참여를 요청하였음을 1993년 10월 29 국회보회의에서의 국방부장관의 답변을 통해 알수 있지만, 김영삼 정부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유보'적인 입장을 고수한다.

2) 김영삼 정부의 TMD 유보결정의 배경

(1) 북한 핵 위기로 인한 미사일방어 문제의 국내 정치·사회적 쟁점화

김영삼 정부는 취임 초인 1993년 3월 12일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을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 NPT)에서 탈퇴한다는 서한을 UN에 보내면서 한반도에 북한발 핵 위기가 시작된다. 북한의 이러한 행태는 1991년 12월 31일 남북한 간의 비핵화 공동선언을 채택하고, 1992년 12월 22일 IAEA의 핵안전조치협정에 서명함으로써 줄어들었다고 여겨졌던 북한 핵에 대한 우려가 다시금 살아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북한발 핵 위기는 북한이 개발한 미사일에 핵이나 화학 탄두를 사용함으로써 한반도에 가져올 위협에 대해 다시금 인식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대비가 되어있는지에 대한 불안과 함께 미사일 방어 능력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으며, 미사일방어 능력 확보에 있어 미국과의 협력 문제가 한국사회에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1993년 10월 29일의 국회보회의 회의록은 이러한 쟁점들에 대한 한국 국방부장관에 생각이 잘 나타난다.

(장준익 의원) "일본은 미국과 공동으로 TMD라는 전역미사일방어망 개발에 합의하는 등 대응책 수립에 부심하고 있는 데 반하여 우리 국방부는 부산까지 위협을 주는 스커드C가 배치된 지 수년이 경과한 지금까지도 아무리 대책발표도 없는 데 대해 우리 국민은 지극히 실망하고 또 우려하고 있는바 북한의 스커드C미사일 실전배치에 따른 대책이 무엇인지 국민에게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해 국방부장관) "탄두를 핵이나 화학탄두와 같은 대량살상무기를 장착했을 때 받는 피해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비책 마련은 긴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우선 북한이 SCUD를 발사하지 못하도록 우리 항공기와 지대지미사일로 타격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 하겠으며 다음으로는 일단 발사된 SCUD를 공중에서 격파하는 방안이고 일단 지상에 떨어질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 이렇게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중략) 부가해서 TMD 체계는 SCUD 등의 전술탄도탄 위협에 대비한 전구미사일방어체계로서 미국의 주도하에 세계 여러 나라가 참여하여 연구 개발 중에 있습니다. TMD 체계는 SCUD 등의 전술탄도탄 위협에 대비한 전구미사일방어체계로서 미국의 주도하에 세계 여러 나라가 참여하여 연구 개발 중에 있습니다. TMD는 미국 레이건 대통령이 추진했던 SDI 계획이 안보환경 변화와 자원 제한 등 이유로 현실성 있게 그 규모가 조정된 방어체계입니다. TMD 계획에 대한 참여문제는 지난 9월 미 국방성의 도이치 국방차관이 방한할 때에 구두로 저희들에게 제의한 바가 있고 또 미 측도 이 부분에 관해서 참여제안이 있었습니다. 우리 국방부 입장에서도 북한의 지대지(地對地)위협 대책강구가 긴요함으로써 산하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자체 검토 중에 있으며 이 문제는 한반도 안보상황에 대한 전략적 평가와 한미일 관계, 비용부담, 기술협력, 민수산업에 대한 파급효과 등을 동시에 고려하여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58]

위 회의 내용을 통해 북한의 NPT 탈퇴로 인해 붉어진 핵 위기가 북한의 실전배치된 스커드C미사일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켰음을 알 수 있다. 아래 〈 표 3-2 〉에서 보듯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은 이미 전두환 정부시기 개발이 완료되고 한반도 전역을 사정거리에 두고 있었다. 이전 정부서부터 탄도미사일 위협에 노출된 상태였지만, 북한의 NPT 탈퇴는 북한의 핵개발

58) 국회회의록, 제14대 국회 제165회 제10차 국회본회의 (1993년 10월 29일), p.41

가능성과 그리고 핵탄두도 이어지며 공포로 증대시킨 것이다.

〈 표 3-5 〉 1970~1986 북한의 미사일 개발 일지

시기	내용	발사거리
1984년	단거리 탄도미사일 스커드-B (화성-5호) 첫 시험발사	300km
1986년	단거리 탄도미사일 스커드-C (화성-6호) 시험발사	500km
1990년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노동 1호 (화성-7호) 첫 시험발사	150km
1991년	단거리 탄도미사일 스커드-C (화성-6호)	
1992년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노동 1호 (화성-7호) 시험발사	
1993년	단거리 탄도미사일 스커드-C(화성-6호)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노동1호 (화성)시험발사	1300km
1994년	지대함 순항미사일 시험발사 (금성 1호, KN-01)	
1998년	중거리 탄도미사일 대포동 1호 (광명성 1호) 시험발사	1800 ~ 2500 km

출처 : 홍민. (2017). 북한의 핵· 미사일 관련 주요 활동 분석

이에대한 권영해 국방부 장관의 발언은 미사일방어에 대한 한국정부의 인식을 알 수 있다. 그는 SCUD를 발사하지 못하도록 항공기와 지대지 미사일로 타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며, 이 다음이 공중에서 격파하는 것이라고 차등을 둠으로써, 미사일방어체계의 효율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 표 3-6 〉 1994~1998 방위력 개선비와 사용 목적

시기	방위력 개선비	사용 목적
94년	3조 396억	전차, 장갑차, 자주포 양산 헬기, 잠수함, F-16 전투기 도입
95년	3조 2,267억	
96년	3조 4,308억	
97년	3조 9,794억	차기 FM무전기, 차기 대공화기 도입 230미리 다련장, 지휘소 자동화
98년	4조 802억	

출처 : 국방부, 『1997~1998 국방백서』, (국방부, 1997).

당시 한국은 전차, 장갑차, 자주포, 헬기, 잠수함, 신형 전투기 등의 도입에 집중하고 있었으며, 상대적으로 무기체계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미사일방어 전력의 도입은 고려하지 않고 있었다.

또한, 쟁점화되는 TMD 참여에 대하여 국방부에서는 한보도 안보 상황과, 한미일 관계, 비용문제, 기술협력, 민수산업 등의 파급효과 등을 동시에 고려하여 TMD 참여 문제가 검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1994년 초 클링턴 정부가 대북 압박의 일환으로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한국 배치를 추진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결정은 김영삼 정부와의 협의 이전에 미국 언론을 통해 공개 되면서, 패트리어트 배치와 TMD 참여에 대한 정치적 공격에 더하여 북핵문제 있어서의 주도적 이미지를 대거 실추하였다.[59] 당시 야당과 언론은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미국의 상업적 동기에 의해 추진되는 것이며,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한다는 주장을 하였다.[60]

한승주 외무부 장관은 국회 발언을 통해 미국 측에서 TMD 참여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는 국방부 장관의 입장을 '제의 없음'으로 번복한다.

59) 박용수. 2011. 김영삼정부 북핵위기 대응의 한계에 대한 재평가: 김영삼 대통령의 주도성 추구성향과 정부대응의 경직성을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Journal of Korean Politics), 20.

60) 『한겨레』 1994년 4월 22일 https://www.hani.co.kr/arti/legacy/legacy_general/L297835.html (검색일: 2022년 5월 25일)

(한승주 외무부장관) "다음 임복진 의원님께서 TMD, 즉 전역미사일 방어 참여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질문하셨습니다. 북한의 로동 1호 미사일 시험발사 성공 등을 계기로 전역미사일방어구상이 미일 간에 협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미측이 TMD사업에 대한 구체적 협력을 우리에게 제의해 온 바는 없습니다. 우리는 중장기적으로 대미사일방공망체제 강화차원에서 우리나라의 TMD 참여문제를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지만 그러한 참여를 결정한 일은 없습니다." [61]

1994년 2월 제 166회 제6차 본회의에서는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를 둘러싸고,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가 TMD에 참여를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혹이 있었다는 점과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북핵 문제의 민감성을 감안하여 한미 간 검토 중인 사안임을 알 수 있다.

(임복진 의원) "이 패트리어트는 무기 자체가 아니고 미국이 동북아에서 추진하고 있는 TMD계획의 일환이에요. 이 TMD계획에는 패트리어트를 포함해서 ERINT라든지 THAAD 같은 각종 미사일이 포함되는데 이것 엄청나게 돈이 들어요. 미국은 이를 위해서 일본자본과 우리의 참여를 지금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의 핵과 스커드가 나온 것도 여기에 함수관계가 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방부가 차기 유도무기사업계획에 패트리어트를 고려한 것 같은 것을 제가 발견했는데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소신을 밝혀 주세요." [62]

(이석현 의원)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성능 상으로 치명적인 결함이 있고 또 한국의 지형조건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명이 되어가지고 그동안 미국 측의 집요한 압력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것을 응하지 않았던 그런 무기입니다." [63]

---

61) 국회회의록, 제14대 국회 제166회 제6차 국회본회의 (1994년 2월 21일), pp.6-7

(한승주 외무부장관) "미국정부의 패트리어트 미사일 및 아파치 헬기의 배치계획은 주한미군 전력현대화계획의 일환으로서 북한에 대한 억지력 강화를 위한 군사적 고려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서 추후 우리 정부에 팔기 위한 상업적 목적과 결부시킬 수는 없습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순수방어용무기입니다. 그러나 현시점의 민감성을 감안해서 동 미사일 배치와 관련해서 미국과 검토,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64]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문제에 대해 검토하던 김영삼 정부는 1993년 3월 19일 판문점에서 열린 제 8차 남북 특사교환 실무접촉에서 서울 불바다 발언이 한국 언론을 통해 주목받으면서 신속한 배치 결정을 내리게 된다. 서울 불바다 발언이 있고 3일 후인 3월 22일 김영삼 대통령은 클린턴 대통령과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주한미군에 배치하는 것을 합의하였다고 발표하였고, 1994년 4월 18일 패트리어트의 1차 선적분이 부산에 도착하게 된다.

김영삼 정부에서는 북한의 핵 문제가 패트리어트 배치 문제로 패트리어트 배치문제가 다시 TMD 참여 문제로 연계되면서, 미사일방어체계와 미국과의 협력 문제가 국내 정치·사회적으로 쟁점화 되는 첫 시기라고 할 수 있으며, 문제해결 과정에서 미국과의 마찰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문민정부 출범을 계기로 의욕적으로 구상했던 '신 외교 정책'이 북한의 핵 문제가 한반도의 상황의 복잡성을 강화 시키며 최대의 안보 현안으로 강조되면서 제 기능을 못하게 된 것과 영향이 커 보인다. 결국 김영삼 정부 시기 미국과의 미사일방어 협력의 수용성은 자체적인 미사일방어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며 시기상조라는 내부적 결단에도 불구하고, '거부'가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었고, 패트리어트라는 무기체계도입이 미국 주도로

62) 국회회의록, 제14대 국회 제166회 제6차 국회본회의 (1994년 2월 21일), p.6
63) 국회회의록, 제14대 국회 제166회 제6차 국회본회의 (1994년 2월 21일), p.14
64) 국회회의록, 제14대 국회 제166회 제6차 국회본회의 (1994년 2월 21일), p.41

공개되면서 북핵문제에 있어 자율성을 가지고자 했던 김영삼 정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수용'결정의 걸림돌로 작용하게 되었다. 김영삼 정부의 유보 결정은 이러한 점들이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2) 김영삼 대통령의 주도성 추구 성향과 북한에 대한 높은 위협인식 및 보수성

김영삼 대통령은 1993년 취임사에서 동맹보다도 민족이 중요하다며, 김일성 주석과 조건 없는 만남을 제안할 정도로 전향적이고 포용적인 성향을 보였다.

> *"김일성 주석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서로 협력할 자세를 갖추지 않으면 안됩니다. 세계는 대결이 아니라 평화와 협력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민족과 국가 사이에도 다양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동맹국도 민족보다 더 나을 수는 없습니다", "김일성주석이 참으로 민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진정한 화해와 통일을 원한다면 언제 어디서라도 만날 용의가 있다"* [65]

하지만, 동시에 3월 5일 육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는 한반도가 마지막 냉전지대이며, 북한이 대남적화전략을 포기하지 않고 있으며, 남한과 북한의 상호 핵사찰을 강조하며, 남북 관계회복을 위해 북핵문제 해소가 필요함을 주장했다.

> *"한반도는 '마지막 냉전지대'의 이름을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북한이 함께 유엔에 가입하고 대화를 통한 새로운 관계가 모색되고 있지만, 북한은 여전히 대남적화전략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략) 북한이 끝내 동족간의 핵사찰을 거부하여 국*

65)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김영삼 대통령 취임사" (1993) https://www.pa.go.kr/online_contents/inauguration/president14.jsp (검색일 : 2022년 5월 25일) 대통령 기록관

66)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육군사관학교 졸업식" (1993) https://www.pa.go.kr/res

제기구에 의한 핵사찰이 강요되는 상황을 맞는 것은 민족적 불행입니다. 북한 당국은 하루빨리 남북한 간의 상호 핵사찰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민족문제를 민족의 힘으로 풀어가는 새로운 전기를 열어야 합니다." [66]

김영삼 대통령의 육군사관학교에서 발언은 당시 북한의 NPT 탈퇴 선언이 이루어지긴 전인 1993년 3월 5일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가 가지고 있던 북한에 대한 위협을 크게 염려한다는 것과 보수적인 성향이 북한 핵 위기 이전부터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며, 이후에도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김영삼 대통령의 성향을 반영하듯 같은 해 3월 팀스피리트 훈련이 이루어졌으며, 1995년 북방백서에는 노태우 정부 시절 사라졌던 '주적' 개념이 다시 등장하면서, 김영삼 정부의 격양된 대북 위협인식 수준을 지속적으로 보여준다.[67] 이것은 김영삼 대통령의 대북포용조치가 북한에 대한 봉쇄기조를 기본으로 북한의 호응을 기대하면서 추진된 것이었음을 보여주며,[68] 이전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이나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의 적극적 방식과 대조되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김영삼 대통령은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대북문제의 주도성이 한국에 있으며, 이것을 대외적으로 보여주고자 하였다.[69] 1994년 패트리어트 배치 문제가 한국과 협의 전 미국 언론을 통해 먼저 공개되자, 패트리어트 배치가 북한에게 불필요한 자극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최종결정을 유보하는 요청을 하였고,[70] 이후 1994년 3월 19일 판문점에서의 제8차 남북 특

---

earch/contents/speech/index.jsp (검색일 : 2022년 5월 25일)

67) 국방부, 『1995 국방백서』, (국방부, 1995).

68) 박용수. (2011). 김영삼정부 북핵위기 대응의 한계에 대한 재평가: 김영삼 대통령의 주도성 추구성향과 정부대응의 경직성을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Journal of Korean Politics), 20.

69) 당시 레이니 주한미대사(1993-1997)에 의하면 김영삼 대통령이 가장 우려했던 것은 한국이 배제되는 상황이었고 이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굴욕이었다(Korea Economic Institute 2011, 136).

70) 『KBS뉴스』 1994년 2월 19일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3737629 (검색일: 2022년 5월 25일)

사교환 실무접촉에서 북의 차관이었던 박영수의 '서울 불바다' 발언이 대중들에게 공개되면서 대북 강경론이 지지를 받을 여건이 조성되자, 2일 뒤인 21일 김영삼 대통령은 순수 방어용무기인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빠른 시일 내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한미 간에 협의를 진행하라는[71] 지시를 내린다.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서울 불바다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러한 김영삼 대통령의 주도성 추구 성향은 정책효과보다도 상대로부터 자신의 우위를 인정받고 개별 상황에서 주도성을 인정받는데 초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영삼 대통령의 주도성 추구는 '4자회담'을 합의한 이후에도 클링턴 정부와 마찰을 빚었는데, 대표적으로 미측의 베를린 회담을 통한 북미 대화에 있어서 미국의 대북 접근을 가속화 하는 것을 문제 삼았고, 대화의 주역이 한국임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김영삼 대통령의 주도성 추구는 적극적인 대외전략이라기 보다 미국과 북한간의 협상에 문제를 제기하는 소극적 방식으로 나타남을 보여주었다.

김영삼 대통령의 정치에서 주도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성향과 북한에 대한 보수성은 북한의 핵문제와 결부되면서 미국과의 미사일방어 협력 결정에 있어서도 수용성에 부정적인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북핵문제로 미사일방어 문제가 정치·사회적으로 쟁점화 된 상황에서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 계획의 협력을 한다면 한국의 주도성을 상실한 채 미국의 MD체계에 편입되는 모습으로 비추어 질것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며, 그렇다고 거부의사를 표한다면 직면한 북핵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고 여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 김영삼 대통령의 '유보' 결정은 그의 정치 성향이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

71) 『한경』 1994년 3월 22일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1994032200111 (검색일: 2022년 5월 25일)

4. 대북 포용정책과 김대중 정부의 TMD 거부

1) 클링턴 정부의 TMD 참여 요구와 김대중 정부의 거부

클링턴 정부의 BMDO는 북한이나 이란, 이라크를 포함한 미국의 잠재적 적국의 탄도미사일 공격 위협에 노출될것이라는 가정 하에 2015년까지 요격 미사일 100기와 레이거 기지 등으 ㄹ배치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72] 그러나 1998년 7월, 국방부 장관이었던 럼스펠드(onald H. Rumsfeld)가 보고한 미국에 대한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평가 보고서는 이란이나 북한같은 국가들이 미국의 예측보다 훨씬 빠른 시간 안에 장거리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에 성공하고 배치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73] 잠재적 적국의 탄도미사일 확산속도가 빨라진다는 이러한 위기의식은 1998년 8월 31일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실험 이후 더욱 확대되며, 한국의 TMD 참여 요청으로 이어지게 된다.

1998년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이후 한국의 TMD 참여에 대한 미국측의 요청은 1999년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1999년 4월 미국의 국방부가 발간한 동아시아에서의 TMD 구축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안보환경을 고려하였을 때 한국이 TMD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74] 또한, 1999년 10월 13일 대북정책 조정관이었던 윌리엄페리는 보고서를 통해 북한에 대비하기 위하여 한국에서의 TMD가 필요함을 언급하고 있다.[75]

---

72) BMDO, "Statement for the Record to the Senate Foreign Relations Committee on Foreign Missile Developments and the Ballistic Missile Tiereat to the United States Through 2015," September 16, 1999,

73) FAS, "COMMISSION TO ASSESS THE BALLISTIC MISSILE THREAT TO THE UNITEDSTATES," July 15, 1998

74) U.S. Department of Defense, Theater Missile Defense Architecture Options in The Asia-Pacific Region, U.S. Department of Defense, May 1999.

75) William J. Perry, “Review of United States Policy Toward North Korea: Findings and Recommendations”, Report by U.S. North Korea Policy Coordinator and Special Advisor to the President and the Secretary of State, Washington, DC, October 12 1999.

1998년 9월 3일에 있었던 국방위원회에서는 북한의 대포동 1호 미사일 시험발사와 관련한 국방현안보고가 있었으며, 여기서 한국 내에서의 TMD에 관한 논의들을 살펴볼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TMD 거부가 기본적인 방침임을 밝힘과 동시에 앞으로의 계획은 비공개로 답변을 하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여주었다.

(김덕 의원) "우리 군은 지금까지 미국과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TMD체제 구축문제에 대해서 아마 참여하지 않는다는 방침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정확한 것입니까?"
(안병길 국방부차관)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76]

(천용택 국방부장관) "임복진 위원님을 포함한 많은 위원님께서 우리의 TMD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대응과 우리의 대응 태세,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물으셨는데 이것은 비공개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77]

김대중 정부는 약 5개월 뒤인 1999년 2월 24일 국방위원회에서는 일본의 TMD 구축이 동북아시아의 군비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할 정도로 TMD 구축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천용택 국방부장관) "지난 1월초 한일 국방장관 회담 시에 제가 일본방위청 장관에게 북한의 변형된 대포동 미사일 발사이후 일본 국민이 받은 충격과 이에 따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는 일본의 입장은 이해하나 TMD나 정보위성은 고도의 첨단기술이 요구되는 무기체계이므로 주변국을 자극하여 동북아 지역에 군비경쟁을 촉진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78]

---

76) 국회회의록, 제15대 국회 제196회 제2차 국방위원회, (1998년 9월 3일), p.8
77) 국회회의록, 제15대 국회 제196회 제2차 국방위원회, (1998년 9월 3일), p.28

이후, 천용택 국방부 장관은 1999년 3월 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의 기자회견에서 북한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전력수단으로서 TMD가 효과적이지 않으며, 한국의 경제적 상황과 기술적 상황이 TMD에 참여하기에 부족하여 TMD 참여를 반대한다고 밝힌다.[79]

이어서 김대중 대통령은 1999년 5월 5일 청와대 본관에서 미 CNN TV 가 주최하는 "제 10회 World Report Contributers Conference"에 연설을 하고 참석한 기자들의 질문 중 TMD에 참여할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기자) "미국에서는 TMD(전역미사일 방어체제)를 동북아에 구축하려고 하고 있다. 대만과 일본은 여기에 참가하겠다는 희망의사를 밝힌 바 있고 중국은 이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국의 입장은 무엇인가?"

(김대중 대통령) "한국은 TMD에 참가할 계획이 없다. 휴전선에서 서울까지는 40km 밖에되지 않아서 한국의 안보에 대해 큰 도움이 안되기 때문이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수분안에 서울에 도달한다. 따라서 한국은 TMD계획에 참여하기 보다는 그대신 한·미 양국간의 안보태세를 더욱 강화하여 북한이 감히 근접할 수 없는 안보태세를 확립시켜나가는데 적극 노력할 생각이다." [80]

이러한 김대중 대통령의 TMD에 대한 공개적 거부 발언은 1983년 미국의 SDI 계획이 추진된 이후 대외적으로 미국의 미사일 방어 계획에 동

---

78) 국회회의록, 제15대 국회 제201회 제1차 국방위원회, (1999년 2월 24일), p.17, p.28

79) 『연합뉴스』 1999년 3월 5일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4518825 (검색일: 2022년 5월 25일)

80) 『국정홍보처』 1999년 5월 5일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30016707 (검색일: 2022년 5월 25일)

참하는 것에 '유보'적인 태도를 취한 한국의 입장에서 선회하여 처음으로 '거부'의사를 명확하게 밝혔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2) 김대중 정부의 TMD 거부 결정의 배경

(1) 페리프로세스와 김대중 정부의 일관된 대복포용정책

1998년 8월 북한 금창리 핵 시설에 대한 의혹과 31일 발사된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은 동북아 국가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이에 클링턴 정부는 1기 정부 시절 국방장관을 지낸 윌리엄페리를 대부정책 특별조정관에 지명하여, 현재의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구상토록 하였다. 페리는 약 6개월간의 조사를 통해 1999년 10월 '페리프로세스'라고 알려진 보고서(이 보고서의 원제는 Review of United States Policy toward North Korea: Findings and Recommendations 이다) 를 제출한다.[81]

페리프로세스는 북한 핵문제를 푸는 방법으로 화해와 대결을 제시하였다. 먼저 화해는 북한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중지'에 도달하기 위해 고위급 회담을 통하여 북한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대북 제재 종식과 경제 정치 관계를 단계적으로 상호적인 방식으로 개선함으로써 대북압력을 완화하는 방식을 제안하는 한편, 만일 북한이 응하지 않을 경우 좀 더 단호한 대북 압력 정책으로 선회할 것을 명시하였다.

이러한 패리프로세스는 1999년 9월 북한과 미국관의 베를린 합의에 이르며, 대북한 경제제재 완화라는 성과를 달성하는 한편, 1999년 10월 6일 '국제테러에 관한 북·미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등 성과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클링턴 페리프로세스는 김대중 정부가 추진하는 대북 포용정책과 조화가 잘 맞았다고 볼 수 있다. 김대중 정부에서 추진했던 포용 정책은 북한이 개방과 변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여건을 종성함으로써 남북한 간의 평화 공존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였는데, 이러한 한국의 노력이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한다는 이전과는 상이한 선택을 하는 북한이 좀더 유

81) 동일부 북한정보 포탈, "페리보고서" https://nkinfo.unikorea.go.kr/nkp/term/viewKnwldgDicary.do?pageIndex=1&dicaryId=18(검색일: 2022년 5월 25일)

화적인 태도로 나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김대중 정부의 포용정책은 북한의 도발로 인하여 좌초될 위기를 맞이하였는데, 1988년 6월 북한 잠수정의 강릉 앞바다 침투 사건, 8월 17일 미국 뉴욕타임스의 '북한 핵무기제조공장 건설'에 대한 보도, 동년 8월 31일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 실험 등이 그것이었다. 하지만, 김대중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도발에도 포용정책을 지속해서 추구할 것을 일관되게 천명하였다. 이러한 일관된 대북정책의 추진이 미국의 페리프로세스와 긍정적으로 조응한 것이다.

이러한 정책적 상황에서 한국은 미국과의 미사일방어 협력에 거부하였다. 북한문제를 위해 페리프로세스를 추진하는 한편 한국과의 TMD 협력을 통해 미사일방어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지만, 김대중 정부의 포용정책은 이러한 미사일방어 분야의 협력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것은 한국의 포용정책이 기본적으로 굳건한 안보태세를 유지한 상태에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낸다는 기본적인 기조 안에서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며, 김대중 대통령 개인의 철학인 평화통일론과 북한에 대한 낙관주의로 좀더 명확히 설명할 수 있다.

(2) 김대중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낙관주의와 평화통일론

김대중 정부 시기에 발사된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은 국제사회에 미친 파장이 굉장히 컸었다. 사정거리가 최고 2,100km 될 것이고 실전 배치될 경우 일본 전역과 태평양 상의 미군 시설이 사정권 안에 들어간다는 사실은 한국뿐 아니라 미국과 일본 등에도 큰 충격을 주었다.[82] 하지만, 대포동 미사일 발사가 일본이 TMD에 참여하는 결정적인 촉매로 작용하였으며, 한국 또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능력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북한의 미사일 실험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대통령은 군사적 대결이 아닌 햇볕정책을 통한 평화적 해결을 모색하고자 했으며, 이것은 이전정부가 보여주었던 북한의 도발과 대북 강격기조와는 차별성을 보이는 모습이었다. 김대중 대통

82) 『KBS 뉴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3790940 (검색일:2022년 5월 25일)

령은 북한의 도발이나 상황변화로 포용정책의 기조가 바뀌것을 원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태도는 1998년 10월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 국회 연설에서 잘 드러난다.

"최근 북한은 인공위성 발사실험을 통해 중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북한의 이러한 미사일 개발능력은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사실에 대한 일본 국민의 충격과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이럴 때 일수록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이 함께 협력하여 튼튼한 대북한 공조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북한을 상대함에 있어 우리는 일희일비하기 보다는 단호한 안보태세와 함께 인내와 포용의 자세를 견지해야 합니다. 고립되었을 때의 북한이 가장 위험한 존재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83]

연설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북하의 미사일 개발능력이 지역 평화아 안정을 위협한다는 점을 인정하는 한편, 인내와 포용의 자세를 견지해야 하며, 고립된 북한이 가장 큰 위험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후, 북한의 핵 시설 의혹 문에 있어서도 김대중 대통령은 신중한 모습을 보여준다.

"북한이 제네바 합의를 위반했다는 증거도 아직 없으며, 우리는 확실한 증거도 나타나지 않았는데 지나치게 (남북관계를)악화시키면 간신히 살아난 경제의 회복에 지장을 주게 되며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북한의 핵시설 의혹은 마땅히 밝혀야 하지만 의혹은 있고 확증은 없으며. 몇 달 전에 미국으로부터 북한 영변 핵시설의혹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알아보는 작업을 계속해왔다." [84]

김대중 정부 시기 핵 및 미사일 위협은 이전 정부에서보다 더욱 구체

83) 대통령기록관, https://www.pa.go.kr/research/contents/speech/index.jsp?spMode=view&artid=1308644&catid=c_pa02062 (검색일: 2022년 5월 25일)
84) 이현석. 2015. 한국과 일본 미사일 방어정책 비교 (Doctoral dissertation,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재인용

화되어 한반도의 위협으로 다가왔지만, 이것을 받아들이는 김대중 대통령의 태도는 일관된 포용정책과 평화적 해결을 하고자하는 신념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미사일 문제에 있어 김대중 대통령의 이러한 태도는 이전 정부 시기 아시아 태평양 평화재단 이사장 시절에서도 드러났었는데, 당시 이사장은 한국의 패트리어트 배치 문제와 팀스피리트 훈련에 대하여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하였다.[85] 그는 팀스피리트훈련이 남북 대화의 장애가 되어서는 안되며 한국의 안보태세를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해결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가졌던 것이다.[86]

김대중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선출되기 이전부터 본인 스스로의 평화통일관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1994년 아시아·태평양평화재단을 설립하고 1995년 8월 출간한 김대중의 3단계 통일론[87]은 통일의 3대 원칙을 자주, 평화, 민주로 설정하고 있으며, 1단계 남북연합, 2단계 남과 북의 지역자치 정부로 구성된 연방제. 3단계 미국, 독일식 연방제 완전통일을 지향하고 있었다.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에도 지속적인 포용정책을 펼 것을 주장한 것과, 취임과 동시에 미국과의 미사일방어 협력을 공개적으로 거부한 결정도, 이러한 확고한 평화와 통일에 대한 본인만의 철학에 기초한다고 볼 수 있다. 그의 통일론의 1단계였던 남북 연합 단계에서 평화 공존을 위해 평화협정 체결과 군비통제, 남북한 평화공존이라는 세가지 큰 과제[88]가 있었다. 이 중에서도 군비통제는 남북한 간의 축소지향적 군사력 균형을 추구하였기에 김대중 대통령에게 있어서 북한의 도발로 이한 미측의 전력장비 도입이나, 군사협력 강화는 군비경쟁을 가속화시키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군비통제에 대한 김대중 대통령의 인식은 일종의 낙관주의에 기반한 것으로 보인다. 그의 자서전에는 북한이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구심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발언이 있다.

---

85) 『KBS 뉴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3738987 (검색일:2022년 5월 25일)
86) 『더 중앙』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05458#home (검색일:2022년 5월 25일)
87) 『김대중 자서전 1, 2』, p. 600.
88) 김학재. 2017. 김대중의 통일· 평화사상. 통일과 평화, 9.
89) 『김대중 전집Ⅰ 제10권』, p. 520.

"북한이 핵탄두 몇 개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핵무기로 주민 밥을 먹이겠습니까." [89]

이러한 북한 핵무기와 전력에 대한 낙관론은 지난 정부가 북한과 한국간의 대결적 구도에서 '6.25전쟁'의 경험과 '대남 적화 통일'이라는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을 버리지 못했던 반면, 김대중 대통령의 평화통일 사상에 뿌리를 두어 일관된 대북포용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김대중 정부의 북한에 대한 낙관론과 평화 통일론은 전두환 정부서부터 유보적 입장을 이어오던 미국과의 미사일방어 정책 협력에 대하여 공개적인 '거부'입장을 취하는 것을 표출되는데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5. 美 MD 협력요구에 대한 한국의 수용성 결정요인 비교

1983년부터 1999년 까지 미국의 미사일방어 협력 요청에 대한 한국의 수용성과 수용성을 결정하는 결정요인들의 영향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표 3-7 〉 정부별 美 MD 협력요구에 대한 한국의 수용성 결정요인

구분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외부	냉전적 대결 구도	上	下	下	下
외부	美 MD 협력 요구 수준	中	下	中	中
외부	중국의 美 MD 거부 압박	下	下	下	下
외부	북한의 핵 · 미사일 위협	下	下	上	中
정부	MD체계 구축의 재정 부담	上	上	上	上
정부	MD체계의 군사적 필요성	下	下	下	下
정부	대북 포용정책	下	上	下	上
정부	한미 관계	上	上	中	上
사회	MD에 대한 사회적 관심	下	下	中	中
개인	축소 지향의 군사적 균형 추구	下	下	下	上
수용성 결정		유보	유보	유보	거부

출처 : 본문 내용을 바탕으로 필자가 직접 정리

다른 정부와 차별성이 두드러지는 차별 요인을 진한 음영으로, 타 정부와 차별요인이 적은 요인을 연한 음영으로 처리하였다. 먼저 외부요인 중 하나인 냉전적 대결구도는 전두환 정부때 가장 극심하게 작용하였다. 연구시기였던 1983년부터 1988년은 신냉전의 대결구도가 주를 이루었다. 다시의 전두환 정부는 내부적으로 SDI 참여를 결정하였었고, 당시의 대결구도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노태우 정부에서 미국의 MD 협력 요구 수준은 매우 낮았다고 평가하였는데, 당시 레이건 정부가 추진하던 SDI는 재정삭감이 이루

어지면서 향후 추진이 불투명해 졌으며 부시정부가 들어서면서 새로운 미사일방어사업이 GPALS가 추진되었기 때문이다. 당시 노태우 정부는 GPALS 참여를 요청받지만 구체적으로 임기 막바지였기에 실질적으로 참여검토를 할만한 시간이 부족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MD체계 구축에 대한 재정적 부담과 MD 체계의 군사적 필요성은 연구대상이된 4개의 정부에서 모두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당시 한국은 미사일방어 체계 개발을 위한 자체적인 예산 배정을 하지 않는 상태였고, 이는 비용대비 효과를 고려하였을 때 군사적 필요성이 매우 낮음을 의미하며, 김대중 정부와 김영삼 정부의 국방부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방안으로 미사일방어가 효과적이지 않음을 언급한다는 점에서 뒷받침 된다. 군사적 필요성에 대한 고려가 비용대비 효과가 교려되는 과정임을 생각해 보았을 때 재정 부담 역시 컸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김대중 대통령 시기는 축소 지향의 군사적 균형 추구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낙관주의와 자신만의 통일론을 정립한 인물로 그의 평화 통일론은 한반도의 군사적 균형이 축소 지향적인 군비통제로 이루어지는데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이러한 시각은 대통령으로 선출되기 전부터 신념화된 것으로, 한국의 패트리어트 배치와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남북대화를 막을 것을 우려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이 1983년부터 이어지던 미국의 미사일방어정책 협력요구에 대한 공개적인 '거부'발언은 이러한 개인적인 통일관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Ⅳ. 결론

본 연구는 1983년부터 1999년까지 미국의 미사일방어 협력요구에 대한 한국의 수용성의 변화상을 보이고자 하였다. 전두환 정부 시기부터 이어온 미국의 협력 요구에 대해서 한국의 지속적인 '유보' 입장을 보이다가 김대중 정부에 들어서 '거부'로 방향을 선회하였기 때문이다. 그러한 변화상을 추적함으로써 각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을 비교분석하고 한국이 '거부'로 선회한 수용성 결정요인을 밝히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일본과의 비교연구를 통해 한국의 수용성 결정이 일본과는 다른 상황에서 비롯되었음을 주장하며, 일본과 상이하면서, 수용성 결정에 영향을 주는 모든 부분을 '거부'의 원인으로써 지목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는 연구 시점을 한국과 일본의 정책 차별성이 생긴 시점에 집중하게 한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9년 공개된 SDI 외교문서는 전두환 정부시절 한국이 SDI에 협력하기로 내부적인 결정인 내렸음이 밝혀지면서 국가간 비교연구가 아닌 정부 내에서의 시기별 비교연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것이다.

연구결과 한국의 수용성이 김대중 정부에서 '거부'로 전환되었던 것은 김대중 대통령의 신념화된 평화 통일론과 북한에 대한 낙관주의가 결합하여, 한반도의 군사적 균형을 축소 지향적으로 추구한다는 점이 중요한 수용성 결정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대통령의 이러한 개인 특성은 이전 대통령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성향이었으며, 미국과의 미사일방어 협력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사안이기에 설명력을 더해준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개인 변인인 대통령의 정치적 신념이 외교정책 결정에 있어서 핵심변수로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실은 로즈노우는 개인변인이 저발전 경제에서 보다 우세한 변인이라고 주장한 것과는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이러한 결과는 '미사일방어'와 '미국과의 미사일방어 협력'이 미치는 미래의 영향력에 정보가 부족한데서 올수 있을 것 같다. 부족한 정보 안에서의 정책결정은 합리적인

계산의 영역이라기보다 오인과 오판이 가득한 휴리스틱이 발생하기 쉽기 때문이다. 변인들의 우열이 국가의 자원과 발전 및 저발전 여부와도 관계가 있지만, 결정해야하는 외교사안의 성격 또한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본 연구는 외교정책결정론에 있어서 국가 내에서의 비교분석과 국가간 비교분석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시계열이 다르며 그에 따른 결과적 한계도 분명함을 잘 보여준다. 국가 간 비교 연구가 비교에 있어서 동일한 시기에 나타난 국가를 비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력한 점을 가지지만, 해당 시점에 치우쳐 차별성을 바탕으로 인과를 조작할 수 우려가 있으며, 국가 내에서의 비교 연구는 상이한 시간 때에 나타난 변화상을 추적함으로써 국가 내부의 판단 근거에 대해 좀 더 집중하게 하지만, 상이한 시간대를 비교한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본 연구는 상정한 독립변수가 개량적인 측정이 어렵고 연구자의 판단이라는 정성적인 평가에 의존하고 있다는 한계를 지니며, 동일한 이유로 이론의 일반화가 어렵다는 약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외교정책 결정과정에서 정책 결정자의 개인 신념 변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정책결정의 권한을 분산시킴으로서 이러한 개인 신념의 영향력을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실천적 함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의 연구 시기는 1983년부터 1999년이지만, 연구범위를 2000년대로 확장함으로써 얻는 인사이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미사일방어 전략을 계속해서 변화를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미국이 미사일방어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좀 더 현대적인 연구는 현실정책에 보다 나은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연구의 연구시기를 조정함으로써 김대중 전부의 공개적 거부 이후에 한국의 수용성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에 대한 연구를 향후 연구 과제로 제시한다.

참고문헌

〈 1차 자료 〉

CIA, "Cooperating with Allies in SDI Research", April 11, 1985, Document Number: CIA-RDP87M00220R000100030016-1.

_____,"Current Issues in US-ROK Security Relations", Document Release Date: November 1, 2010, Approved For Release Januray 18, 2011, Document Number: CIA-RDP85M00363R000200260011-4.

_____,“Issues South Korean President wants to Raise with President Ford”, Document Publication Date: November 13, 1974, Document Release Date: January 27, 1999, Document Number: CIA-RDP78S01932A000100180035-1.

_____,"Nuclear Reactor Under Construction In North Korea", Document Release Date: December 8 2008, Document Publication Date: April 19, 1984, Document Number: CIA-RDP86M00886R000800100037-6.

_____,“Presidential Briefing on South Korea’s Nuclear Program”, Document Publication Date: November 3, 1978, Document Release Date: March 19, 2002, Document Number: CIA-RDP81B00401R002500080013-6.

Caspar W. Weinberger, Report of the Secretary of Defense Caspar W. Weinberger to the Congress, on the FY 1988 FY 1989 Budget and FY 1988-1992 Defense Programs,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January12, 1987), AD-A187 382.

President Kim Dae-Jung of South Korea”, Office of the Press Secretary March7,2001https://georgewbush-whitehouse.archives.gov/news/releases/2001/03/20010307-6.html

Department of Defense, Annual Report to the President and the Congress (2002)

_____, Nuclear Posture Review Report (December 31, 2001.)
_____, Quadrennial Defense Review Report (September, 03, 2001.).
_____, "The President's New Focus For SDI: Global Protection Against Limited Strikes(GPALS)", (SDIO, The Pentagon, Washington, DC 20301, Janurary 6, 1991).
_____, Quadrennial Defense Review Report. (U.S.A. Department of Defe nse, September 30, 2001), pp.30-31, pp.52-56, pp.59-61.
_____, Theater Missile Defense Architecture Options in The Asia-Pacific Region, U.S. Department of Defense, May 1999.
Les Aspin Secretary of Defense, Annual Report to the President and the Congress, (Washington D.C: U.S. Government, January 1994).
_____, Report on the Bottom-Up Review. (U.S.A. Department of Defen se, October 1993).
Memorandum for Anthony Lake to Keith Hahn, "Letter from Admiral Murphy RE: Sale of Patriot Missile to Korea", December 3, 199 3, Clinton Presidential Library.
National Commission on Terrorist Attacks upon the United States, The 9/11
Commission Report: final report of the National Commission on Terror ist Attacks upon the United States, (New York: Norton, 2004).
Office of the Press Secretary, "Remarks by President Bush and President Kim
Dae-Jung of South Korea", March 7, 2001, George W. Bush White Ho use Archives https://georgewbush-whitehouse.archives.gov/news/re leases/2001/03/text/20010307-6.html
Remarks Frank A. Rose, Assistant Secretary, Bureau of Arms Control, Verification and Compliance Institute for Corean-American Studi es (ICAS), "Missile Defense and the U.S. Response to the North Korean
Senator Bob Smith's Letter to William J. Clinton, "The Honorable Willia

m J. Clinton", September 6, 1994, Washington. DC 20610-2903, Clinton Presidential Library.
The White House,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 f America (September 20, 2002).
U.S. Congress, Office of Technology Assessment, SDI: Technology, urviv ability, and Software, OTA-ISC-353 (Washington, DC: U.S. Go vernment Printing Office, May 1988).
US Government Office, The President's Strategic Defense Initiative,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January 3, 1985), p.10, Ronald Reag an Presidential Library & Museum, "Foreword Written for a Rep ort on the Strategic Defense Initiative" https://www.reaganlibrary. gov/archives/speech/foreword-written-report-strategic-defense-ini tiative
U.S. President George W. Bush's Speech on Missile Defense at the Nati onal Defense University on May 1, 2001.
William Jefferson Clinton, The President's Radio Address on May 15, 1 993, Clinton Digital Library, May 15 1993.

과학기술부, 『2000 과학기술연구활동조사보고』, (과학기술부, 2000).
국가과학기술심의회, 『2014-2028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 (국방부 전력 정책관실 전력정책과, 2014).
국가기록원, "분단국가의 현실 속에 쉬지 않고 달려온 국방과학"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국민의 정부를 출범시키며 : 국난극복과 재도약 의 새시대를 엽시다", 제15대 대통령 취임사, (1998년 2월 25일).
국립외교원, 『한국 외교와 외교관: 김하중 전 통일부 장관 상권 한중수교 와 청와대시기』,(서울: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외교사연구센터, 2018).
국립외교원, 『한국 외교와 외교관: 양성철 전 주미대사』, (서울: 국립외교 원 외교안보연구소 외교사연구센터, 2015).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과학연구소 40년 연구개발투자효과』, (대전광역시:

국방과학연구소, 2010).
국방부, 『1998-2002 국방정책』, (국방부, 2002).
_____, 『참여정부의 국방정책』, (국방부, 2003).
_____, 『1988 국방백서』, (국방부, 1988).
_____, 『1989 국방백서』, (국방부, 1989).
_____, 『1990 국방백서』, (국방부, 1990).
_____, 『1991~1992 국방백서』, (국방부, 1991).
_____, 『1992~1993 국방백서』, (국방부, 1992).
_____, 『1993~1994 국방백서』, (국방부, 1993).
_____, 『1994~1995 국방백서』, (국방부, 1994).
_____, 『1995~1996 국방백서』, (국방부, 1995).
_____, 『1996~1997 국방백서』, (국방부, 1996).
_____, 『1997~1998 국방백서』, (국방부, 1997).
_____, 『1999 국방백서』, (국방부, 1999).
_____, 『2014 국방백서』, (국방부, 2014).
_____, 『2014 국방백서』, (국방부, 2014).
_____, 『2014 국방백서』, (국방부, 2014).
_____, 『2018 국방백서』, (국방부, 2018).
_____, 『2020 국방백서』, (국방부, 2020).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방 100년의 역사 1919-2018』, (국방부, 2020).
국립외교원, 『한국 외교와 외교관: 공로명 전 외교부 장관』, (서울: 국립외교원 외교안보 연구소 외교사연구센터, 2019).
외교부 외교사료관, 2019년 비밀·비공개 해제문서 "미국 SDI(전략방어계획) 참여, 1985-88. 전6권 제1권 한국의 참여 검토, 1985" 등록번호 26669.
_____, 2019년 비밀·비공개 해제문서 "미국 SDI(전략방어계획)참여, 1985-88, 전6권 제2권 한국의 참여검토 1986-87" 등록번호 26670.
_____, 2019년 비밀·비공개 해제문서 "미국 SDI(전략방어계획) 참여, 1985-88, 전6권 제3권 한국의 참여검토결과", 등록번호 26671.

_____, 2019년 비밀·비공개 해제문서 "미국 SDI(전략방어계획) 참여, 1985-88, 전6권 제4권 제1차 SDI 조사단 미국 방문, 등록번호 26672.
_____, 2019년 비밀·비공개 해제문서 "미국 SDI(전략방어계획) 참여, 1985-88, 전6권 제5권 제1차 SDI 조사단 미국 방문Ⅱ, 등록번호 26673.
_____, 2019년 비밀·비공개 해제문서 "미국 SDI(전략방어계획) 참여, 1985-88, 제6권 제2차 SDI 조사단 미국 방문", 등록번호 26674.
_____, 2019년 비밀·비공개 해제 공개문서 "노태우 대통령 미국 및 UN 방문, 1988.10.17-21. 전9권 제3권 UN총회 연설문", 문서등록번호 26418.
_____, 2020년 비밀·비공개 해제문서 "미국 하원 과학, 우주, 기술위원회 소속 의원단 방한, 1989-8.6-9", 등록번호 28163.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SDI한국참여검토결과보고", 국방부문서, (1988.01.29.), 건번호: 1A00614174605041.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SDI한국참여검토결과보고", 국방부문서, (1988.01.29.), 건번호: 1A00614174605041.

〈국회회의록〉

국회회의록, 제14대 국회 제165회 제10차 국회본회의 (1993년 10월 29일).
국회회의록, 제14대 국회 제166회 제6차 국회본회의 (1994년 2월 21일).
국회회의록, 제15대 국회 제196회 제2차 국방위원회 (1998년 9월 3일).
국회회의록, 제15대 국회 제201회 제1차 국방위원회, (1999년 2월 24일).
국회회의록, 제16대 국회 제239회 제2차 국회본회의, (2003년 5월 19일).
국회회의록, 제16대 국회 제240회 제1차 국방위원회, (2003년 6월 19일).

〈 2차 자료 〉

〈 국내자료 〉

강구영. 2010. “미사일 방어체계에 관한 연구 : 한국의 전역미사일 방어체계 검토를 중심으로.” . 연세대학교 대학원

강봉구. 2001. “ABM 사건과 한미관계: 전략적 선택 모델의 적용”.『국제정치논총』 제 41집 3호.

강정일. 2012. “북중동맹의 공고성에 관한 연구”. 『전략연구』 Vol. 54. 한국전략문제연구소

고영대. 2017『사드배치 거짓과 진실』. 서울: 나무와숲

구갑우 · 최완규. 2011. “북한의 동북아 지역정책 : 안보와 경제 그리고 시민사회”. 이수훈 편.『북한의 국제관과 동북아 질서』. 서울:한울.

국방기술품질원. 2013. “2013 중국 군사력 및 안보 동향”.『주요국 국방·군사동향 시리즈 13-02』. 경성문화사.

국방대학교 합동참모대학. 2003.『직무과정, 연합작전』. 서울:국방대학교.

국회도서관. 2009.『북한 장거리 로켓:미사일』. ㈜예진피앤플러스.

김국신 · 배정호 공저. 2006. 『주일미군 재편의 의미와 시사점』. 통일연구원.

김기협 · 천희상 역. 2002. 『미사일디펜스(MD),환상을 좇는 미국의 방위전략』. 들녘.

김두승 외 3명. 2011. 『방위대강 2010과 한국의 안보』. 한국국방연구원.

김민구. 2014.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발전방안 연구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을 위한 선결조건을 중심으로”. 한성대학교 대학원.

김성걸. 2008. “일본의 미사일(MD) 체계 분석 : 부국강병과 국가적 자존심 상징이며 현대 군사과학의 결집체”.『北韓』 통권 435호 pp.83-90.

김성걸. 2008. “한국의 미사일 방어 선택”.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_____. 2012. “중국의 반접근(A2),지역거부(AD)군사능력 평가”.『군사논단』. Vol. 70. pp. 42-67

_____. 2013. “중국·북한·일본의 미사일 도입 경쟁 : 의미와 전망”.『군사논단』통권 75호. pp. 133-175.
김성은. 2007. “한국의 북한 이미지와 대북정책: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 시기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김성한. 2003. 『미국의 반테러정책과 WMD 확산방지 정책』. 외교안보연구원
김성호. 2007. “북한 미사일 개발의 운영체계와 기술적 평가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김순수. 2010. “중국의 한반도 안보전략과 군사외교”.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김승기 · 최정준. 『국방 100년의 역사 1919-2018』,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20).
김열수. 2013. “킬체인(Kill-Chain)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제(KAMD): 실현가능성을 중심으로”. 『신아세아』 22.4. pp. 112-136.
김의근. 2012. “한국군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 방향에 관한 연구 :적극 방어개념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대학원.
김의순. 1992. “미국의 GPALS 계획소개”.『주간국방논단』 92-449호.
김재관. 2004. “미국의 미사일 방어정책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대응전략”. 『국가전략』 10권 1호. pp. 37-74.
김재천. 2003. “북한 미사일 발사문제와 동북아 지역안보 : 1998년 대포동 1호 미사일 발사와 한·미·일 삼국의 전략적 대응”. 고려대학교 대학원.
김준형. 2015. "한국의 대미외교에 나타난 동맹의 자주성 실용성 넥서스: 진보정부 10년의 함의를 중심으로". 『동북아연구』. 제30권 제2호. 조선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부설 동북아연구소.
김태완. 2012. “일본 ·한국의 미사일 방어체계 비교연구 : 탄도 미사일에 대한 적극적 방어를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대학원.
김태준, 2003. “주한미군 신뢰구축방안” 한용섭 외 5명.『한미동맹 50년과 군사과제』.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김홍철 · 김희성. 2013. “북핵 위협 대비 공군전략 및 전력발전 방안 연구

-KillChain 및 KAMD 중심으로”.『군사논단』. 74. pp. 67-97.
김흥규. 2008. “중국의 북핵외교” 윤영관 · 신성일 편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정착』. 도서출판 한울. pp. 198-248.
나병렬. 2007. “일본의 안보정책 변화에 대한 연구 : 9.11테러 사건의 영향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남창희. 2004.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의 배경과 한국의 대응방향” 『국가전략』 Vol.10. No.1. 세종연구소. pp.7-35.
남창희. 2006. “일본의 미사일 방어체계 정책적 함의”. 『군사논단』 통권 45호. 한국군사학회. pp. 56-75.
노병렬. 2002. “미국 핵정책의 변화와 한국의 안보전략 : MD논의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42집. 1호. pp. 73-99.
류태웅. 2014. “북한의 핵무장과 한국의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대학원
박영준. 2011. “21세기 새로운 위협과 일본의 대응: 방위계획대강 2010을 중심으로”.『2011 안보연구시리즈』 제 12집 10호. 서울 :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문제 연구소.
박영준. 2010. “일본 「방위계획대강 2010」과 한국 안보정책에의 시사점”.『EAI논평』 제 16호. 동아시아연구원.
박용수. 2011. “김영삼정부 북핵위기 대응의 한계에 대한 재평가 : 김영삼 대통령의 주도성 추구성향과 정부대응의 경직성을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20.
박인휘. 2006. “북핵문제의 복합성, 미국의 딜레마, 그리고 동북아 안보의 변화”.『한국정치외교사논총』 28.2. pp. 230-233.
박준복. 2013.『한국 미사일 40년의 신화』.서울:일조각.
박휘락. 2008. 『한국의 미사일 방어 추진방향』. 서울: 국방대학교안보문제연구소.
_____. 2009. “한국의 미사일 적극방어(Active Defense)체제 구축 방향”. 『신아세아』.16권 3호.
_____. 2015. "한국과 일본의 탄도미사일 방어(BMD) 추진 비교". 『국가전략』 제21권 제2호, 세종연구소.

서우덕 · 신인호 · 장삼열. 2017.『방위산업40년끝없는도전의역사』. 서울:한국방위산업학회

신종갑. 2012. “참여정부의 한미동맹정책 연구 : 전략적 유연성 합의와 미사일방어체제 불참결정 비교”. 서울대학교 대학원.

양혜원. 2020. "북핵 위협에 대한 확장억지 전략과 미국 핵우산을 활용한 한국의 안보 방향".『사회융합연구』 제4권 제1호. 국방안보연구소.

_____. 2020. “한국의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부품국산화 필요에 관한 연구”. 『한국방위산업학회지』 제27권 제2호,. 한국방위산업학회

엄상윤. 2014. “한·미·일 MD협력의 양상과 전망”. 『국가전략』. 20. 2. 세종연구소.

윤기철. 2000.『TMD 전구미사일 방어』. 서울:평단문화사.

윤태영. 2000. “북미 미사일회담:협상과정,쟁점 및 해결 전망”.『동서연구』.Vol.12. No.2.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이상옥. 2002.『전환기의 한국외교 이상옥 전 외무장관 외교회의록』. 서울: 도서출판 삶과 꿈

이성진. 2009. “이스라엘·일본의 미사일방어 정책 비교연구”. 서울:국방대학교안전보장대학원.

이수형. 1999. “동맹의 안보 딜레마와 포기-연루의 순환 : 북핵 문제를 둘러싼 한-미 갈등 관계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39집. 1호. pp.21-38.

이영학. 2015. "중국의 북핵 평가 및 대북핵 정책의 ‘진화’", 『중국의 북핵 평가 및 대북핵 정책의 진화』. 서울: 통일연구원

이재영. 2004. “미사일 방어와 동맹 :美國의 MD에 대한 韓.日간 인식 차이 분석”. 연세대학교 대학원.

이재학. 2011. “억제이론으로 본 중국의 핵억제전략”.『신아세아』.Vol18. No.2. pp.96-121.

이정우. 2014.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평가와 대남 군사위협의 변화”.『현대북한연구』.Vol17.No.2.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미시연구소. pp.296-331.

_____. 2012. “북한의 국력과 군사력에 대한 평가”.『현대북한연구』.15

권 3호.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미시연구소. pp.100-145.
임수호. 2007. “실존적 억지와 협상을 통한 확산 : 북한의 핵정책과 위기조성외교 (1989-2006)”. 서울대학교대학원.
임정혁. 2012. “일본의 군사전략 변화에 따른 한국의 대응” 『한국동북아논총』제65호. pp.227-248.
이현석. 2015. "한국과 일본 미사일 방어정책 비교". 서울대학교 대학원.
장달중 · 이정철 · 임수호. 2011.『북미대립 : 탈냉전 속의 냉전 대립』.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전두환. 2017. 『전두환 회고록 2권 청와대 시절 1980-1988』. 경기도: 자작나무숲.
전재성. 2004. “동맹이론과 한국의 동맹정책”.『국방연구』. 제47권 제2호.
전진호. 2010. “일본의 대중국 안보인식 변화 : 외교청서와 방위백서를 중심으로”. 『한일군사문화연구』 Vol.11. pp. 91-109.
정규수. 2012. 『ICBM,그리고 한반도:북한과 한반도 주변 열강의 탄도탄』. 지성사.
조재웅. 2010. “미국의 패권 전략: 미사일 방어체계(MD)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대학원.
최영락. 2018. "한국의 과학기술정책: 회고와 전망", 『과학기술정책』 제1권 제1호. 세종: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최차규. 2010.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 구축과 한국의 전략적 선택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한승주. 2017.『평화를 향한 여정: 외교의 길』. 서울: 올림.
한용섭. 2019.『우리국방의 논리』. 서울: 박영사.
한용섭 외 5명, 『한미동맹 50년과 군사과제』, (서울: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3).
한은아. 2013.“일본 우주개발정책의 전환에 관한 연구 :「평화이용」에서「국가안전보장」으로”.한양대학교 대학원.
함택영 · 서재정. 2006. “북한의 군사력 및 남북한 군사력균형”.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편『북한군사문제의 재조명』.파주:한울 아카데미. pp. 339-405.

현인택. 2017, “사드(THAAD)의 국제정치학: 중첩적 안보딜레마와 한국의 전략적 대안”. 『신아세아』 제24권 제3호. 신아시아연구소.

_____. 1991. 『한국의 방위비』. 서울: 도서출판 한울.

홍관희. 2002.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한국의 대응”. 서울:통일연구원.

홍규덕. 2015. "사드(THAAD)배치에 관한 주요쟁점과 미사일 방어(MD) 전략". 『신아세아』제22권 제4호, 신아시아연구소.

홍성표. 2003. “적정 국방비 논쟁과 국방력 발전 방향” 『주간국방논단』.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홍현익. 2004.『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와 한국의 대응』. 성남:세종연구소.

황일도. 2008. “북한 비대칭 군사위협 연구: 장사정포, 탄도미사일, 핵무기 시뮬레이션을 중심으로”. 북한대학원대학교.

〈 해외자료 〉

Armstrong, M. J. 2014. "Modeling short-range ballistic missile defense and Israel's Iron Dome system" *Operations Research*. 62(5). 1028-1039.

Assmann, L. 2007. *Theater missile defense (TMD) in East Asia: implications for Beijing and Tokyo* Vol. 16. LIT Verlag Münster.

Auner, E. 2014. "Missile Defense Budget Holds Steady." *Arms Control Today.* 44(3). 33.

Baucom, Donald R. 2004, “The Rise and Fall of Brilliant Pebbles,” The Journal of Social, Political, and Economic Studies, Vol. 29, No. 2: 143-190.

Bitzinger, R. A. 2005. *Asia-Pacific Missile Defense Cooperation and the United States 2004-2005: A Mixed Bag.* asia-pacific center for secuirity studies honnolulu hi.

Brodie, B. 2015. *Strategy in the missile age*. Princeton University Press.

Burns, R. D. & Brune, L. H. 2003. *The Quest for Missile Defenses, 1944-2003*. Regina Books.

Catherine Kelleher, 2017, *Missile Defense, Extended Deterrence, and Nonproliferation in the 21st Century*. Maryland: Center for International and Security Studies at Maryland.

Cimbala, S. J. 2019. *The technology, strategy, and politics of SDI.* Routledge.

Cohen, R. 1979. *Threat perception in international crisis*. Madison: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Cronin, P. M. 1994. *Redefining the US-Japan Alliance: Tokyo's National Defense Program*. DIANE Publishing.

DiFilippo, A. 2015. *The Challenges of the US-Japan Military Arrangement: Competing Security Transitions in a Changing International Environment: Competing Security Transitions in a Changing International Environment.* Routledge.

Futter, A. 2013. *Ballistic missile defence and US national security policy: Normalisation and acceptance after the Cold War.* Routledge.

Goldstein, A. 1995. "Discounting the free ride: alliances and security in the postwar world." *International Organization.* 49(1), 39-71.

Graham, B. 2003. *Hit To Kill: The New Battle Over Shielding America From Missile Attach.* PublicAffairs.

Gupta, S. 2003. "Constitution and Shield: Dilemmas, Obstacles and Choices on Japan's Path to Naval Ballistic Missile Defense." *journal of public and international affairs-princeton.* 14. 82-103.

Handberg, R. 2002. *Ballistic missile defense and the future of American security : Agendas, perceptions, technology, and policy.* Greenwood Publishing Group.

Harkavy, R. E. 1998. "Triangular or indirect deterrence/compellence: Something new in deterrence theory?". *Comparative Strategy.* 17(1).

63-81.

Hoff, R. 2015. "US-Japan missile defense cooperation: Increasing securit y and cutting costs" *In American Action Forum.* vol. 2.

Jimbo, K. 2002. "A Japanese perspective on missile defense and strategic coordination" The Nonproliferation Review. 9(2). 56-62.

Kim, T. H. 2009. "South Korea's Missile Defense Policy: Dilemma and Opportunity for a Medium State." *Asian Politics & Policy*, 1(3), 371-389.

Mitchell, G. R. 2001. "Japan-US missile defense collaboration: Rhetoric ally delicious, deceptively dangerous." *Fletcher F. World Aff.* 25. 85.

Morrow, J. D. 1991. "Alliances and asymmetry: An alternative to the c apability aggregation model of allianc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35. No.4. pp 904-933.

Perry, W. J. 1999. "Review of United States Policy Toward North Kore a: Findings and Recommendations." *Washington, DC*, 12, 58-60.

Rynning, S., & Heurlin, B. (2005). China's response to the US missile defence programme: national options and regional implications. In Missile Defence (pp. 145-166). Routledge.

Samaan, J. L. 2015. *Another Brick in the Wall: The Israeli Experience i n Missile Defense.* Army war college barracks strategic studies in stitute.

Schweller, R. L. 1994. "Bandwagoning for profit: Bringing the revisionist state back in." *International security*, 19(1), 72-107.

Snyder, Scott. 2012. *The US-South Korea Alliance: Meeting New Securi ty Challenges.* Boulder, CO: Lynne Rienner Publishers.

Seltzer, N. 2019. "Baekgom: the development of South Korea's first balli stic missile." *The Nonproliferation Review*, 26(3-4), 289-327.

Snyder, G. H. 1984. "The security dilemma in alliance politics." *World politics*, 36(4), 461-495.

_____, 2007, *Alliance politics*. Cornell University Press.

Taojie, J. 1999. "TMD-Source of Tension in the World." Beijing Review, 42(25).

Urayama, K. 2001. "Missile Defense : Japan's wait-and-see approach.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57(6). 33-35.

Watts IV, R. C. 2020. "A Double-Edged Sword: Ballistic-Missile Defense and US Alliances." Naval War College Review. 73(1). 5.

Wilkening, D. A. 2014. *Ballistic-missile defence and strategic stability*. Routledge.

〈 인터넷 자료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김대중 - 장쩌민 한중 정상회담"
https://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3041&subjectTypeId=07&pageFlag=C&sitePage=1-2-2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제35주년 국군의 날 담화” (1983.10.01.)
https://www.pa.go.kr/research/contents/speech/index.jsp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제38주년 국군의 날 담화” (1986.10.01.)
https://www.pa.go.kr/research/contents/speech/index.jsp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UN연설” (1988.10.18.)
https://www.pa.go.kr/research/contents/speech/index.jsp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제37주년 국군의 날 담화” (1990.10.01.)
https://www.pa.go.kr/research/contents/speech/index.jsp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제38주년 국군의 날 담화” (1991.09.24.)
https://www.pa.go.kr/research/contents/speech/index.jsp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제46주년 국군의 날 치사” (1994.10.01.)
https://www.pa.go.kr/research/contents/speech/index.jsp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제51주년 국군의 날 연설” (1999.10.01.)
https://www.pa.go.kr/research/contents/speech/index.jsp

〈 언론 자료 〉

『국정홍보처』 1999년 5월 5일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30016707
『한국경제』 1994년 5월 15일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1994051500261
『KBS뉴스』 1999년 4월 29일
https://imnews.imbc.com/replay/1999/nwdesk/article/1779937_30729.html
『KBS뉴스』 1999년 5월 5일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801094
『Los Angeles Times』, January. 30, 1991
https://www.latimes.com/archives/la-xpm-1991-01-30-mn-271-story.html
『MBC 뉴스』 1992년 5월 30일
https://imnews.imbc.com/replay/1992/nwdesk/article/1915901_30556.html

Abstract

Korea's Acceptance of U.S. Request for Cooperation in missile Defense

Concentration upon the Korean Government's Decisions on Acceptance in 1983 ~ 1999

SEUNG JIN HONG
Dept. of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U.S. request for cooperation in missile defense and South Korea's acceptability began in 1983 when the Reagan administration's Strategic Defense Initiative (SDI) was promoted. SDI had the concept of intercepting large Soviet ballistic missiles from space. To realize this, astronomical cost investment and technology development were required. The United States begins to demand cooperation from its allies to successfully promote SDI.

South Korea was believed to have consistently rejected the U.S. demand for cooperation. Existing studies note that Japan accepted missile defense cooperation with the United States in the late 1990s. They tried to explain the cause of policy differentiation in missile cooperation with the United States through comparison between Korea and Japan.

However, the SDI diplomatic document released in 2019 reveals t hat the Chun Doo-hwan administration has internally decided to partici pate in SDI. This fact reminds us that the Korean government decided t o participate privately after the U.S. demand for cooperation in missile defense in 1983, but later continued to show a "hold" position and then turned to an open "rejection" by the Kim Dae Jung government in 199 9.

This fact raises the need for research on the process of changing acceptability decisions by period, as it is noted that existing comparative analysis studies with Japan mainly focused on the point of "rejection" in the late 1990s and neglected comparative studies by period within the c ountry. Then, why did the Korean government move from a "reserved" position to a "reject" position on the U.S. demand for cooperation in mi ssile defense?

This study applied the preliminary theory with James Rosenau an d the funnel theory proposed by Charles Kegley, Jr. and Eugene Wittko pf to track the changes in acceptability of the Korean government's dem and for cooperation in missile defense from 1983 to 1999 and identify acceptability determinants.

As a result of the study, President Kim Dae Jung's pursuit of a re duction-oriented military balance was a key factor that changed the Ko rean government's acceptance to "rejection." President Kim Dae Jung is a person who established optimism about North Korea and his own theor y of unification, and his theory of peaceful unification had a positive vi ew of the reduction-oriented arms control of the military balance on th e Korean Peninsula. His belief in unification was able to derive that he played a decisive role in "denying" the U.S. demand for cooperation in missile defense.

This study, which examined the Korean government's acceptability

determinants of U.S. missile defense cooperation, showed the influence o f individual variables in foreign policy decisions, and expanded the disc ussion on U.S. missile defense cooperation and Korea's acceptability.

keywords : Missile defense,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Korea, foreig n policy making process, Korea's acceptability
Student Number : 2020-20915